



주간통일정세 2009-29(2009.07.13~07.19)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09-29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의자에 앉은 채 현지지도(7/13, 조선중앙TV)

-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밤늦게 김정일 위원장의 이 공장 현지지도 소식을 전한데 이어 조선중앙TV가 14일 내보낸 현지 지도 사진 중에는 그가 실내에서 의자에 앉아 보고를 받는 모습은 물론 공장 바깥에서도 다른 수행 간부들과 함께 의자에 앉아 공장 간부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주는 장면이 여러 장 포함
- 이날 공개된 김 위원장의 실내 사진 중에는 김 위원장의 앞에 놓인 탁자에 재떨이가 놓여있는 장면도 눈에 띄었음. 10년 넘게 금연을 했던 김 위원장은 뇌졸중 후유증을 앓고 있는 와중에서 다시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짐.
- 이외에도, 무장한 경호원이 파란색 대형 우산을 펴 김 위원장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고 있는 모습, 다인승 흰색 카트에 다른 몇몇 수행원들과 올라 탄 채 공장안을 둘러보는 사진도 공개

● 김정일 후계, 현 단계에서 제기 안돼(7/13, 연합뉴스)

- 김태중(金泰鍾) 북한 조선노동당 국제부 부부장은 12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 문제에 대해 “현 단계에서는 제기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 그는 이날 북한을 방문 중인 일본 ‘후쿠오카(福岡)현 북일우호협회’ 회원들과 평양 시내 한 호텔에서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힘.
- 김 부부장은 “지금 세계의 언론이 크게 보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김 위원장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2배 이상, 국내 각지에서 현지 지도를 하고 있는 등 매우 정열적으로 활동한다”고 언급
- 또 핵실험에 대해서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우리에게 핵을 갖도록 했다고 할 수 있다”고 비난하고 “6자회담에는 두 번 다시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 스위스 지인들 통해 본 김정운(7/16, 워싱턴포스트 인터넷판)

- 김정운이 한때 몸담았던 것으로 알려진 스위스 베른 칸톤의 리베펠트-슈타인힐츨리 공립학교에서 그를 만난 지인들의 증언은 김정운은 명석하고 지적으로도 부지런하면서도 농구에 대한 열정이 강하고 승부욕도 높았던 것으로 전해진다고 워싱턴포스트(WP) 인터넷판이 16일 보도



- 또 WP는 현재의 김정운의 모습에 대해 정치엔 다소 무관심하고 26세 여는 또래의 관심사와 비슷한 생각을 지닌 인물일 것이라는 미국 고위관리의 말도 인용해 소개
- 김정운으로 추정되는 '박 운'이란 가명의 학생은 리베펠트-슈타인홀출리 공립학교에서 1998년 8월부터 2000년 가을까지 수학

나. 정치 관련

● 北, 비동맹회의 '한반도 조항' 삭제 합의(7/19,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19일 이집트 샤름 엘-셰이크에서 열렸던 제15차 비동맹운동(NAM)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공동 선언문과 관련, 북한의 입장이 반영돼 왔던 이른바 '한반도 조항'이 34년 만에 처음으로 삭제된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 없이 "6자회담이 더는 필요 없게 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에 대해 최종문건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
- '게스트' 자격으로 이 회의에 참석한 박인국 주 유엔 대사는 폐막 직후 '한반도 조항' 삭제와 관련해 "한반도 조항에는 그동안 주한미군 철수 등 북한의 일방적 주장이 여과 없이 포함됐었다"며 "이번 회의를 준비하는 각료회의에서 북한은 한반도 조항 중 6자 회담 관련 내용을 삭제하려 했으나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저지됐고, 결국 조항 전문이 34년 만에 처음으로 합의문에서 빠지게 됐다"고 설명

● 통일신보, '南 해외파병부대는 북침 경험쌓기용'(7/18, 통일신보)

- 통일신보는 18일 남한의 해외파병 상비부대 편성계획과 관련, 해외파병을 통해 실전경험을 축적하고 전시작전능력을 강화해 북침을 감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 신문은 국방부가 6월 발표한 '국방개혁 기본계획'에서 국제사회에서의 국가위상을 고려해 3천명 규모의 해외파병 상비부대를 편성기로 한 것은 "공화국에 대한 침공을 기정사실화하고 그 사전준비의 일환으로 벌여놓은 북침전쟁준비책동"이라고 주장
- 신문은 "이미 남조선군부는 평화재건지원의 명목으로 동티모르를 비롯한 여러 분쟁지역들에서 새마을운동, 푸른 천사작전 등과 같은 각종 민사작전을 벌여놓고 조선반도 유사시 공화국 북반부에서 진행할 치안유지와 주민관리 경험을 축적한 바 있다"고 지적, 또 남측이 이라크 전쟁에 자이툰 부대를 파견, 평화재건과는 상관이 없는 대규모 장거리 야간 수송작전을 맡아 진행했다며 이는 북침을 위한 군사작전을 숙달해 온 것이라고 주장
- 신문은 이어 해외파병 상비부대 편성계획은 "유엔에 대한 그 무슨 공헌과 다국적협력을 통해 조선반도 유사시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 무력을 조선전선에 손쉽게 끌어들이자는 것"이라며 "총체적으로 미국의 가려운 데를 긁어줘 상전의 환심을 사는 것과 동시에 북침



전쟁준비를 완성하는 등 일거양득을 노리고 면밀히 타산한 데 기초해 추진되는 반역책동”이라고 비난

● **김영남, 6자회담 영원히 끝났다(7/16, 연합)**

- 북한의 서열 2위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15일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북한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군축협상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며 6자회담은 영원히 끝났다고 언급
- 김 위원장은 이집트의 홍해 휴양지인 샤름 엘-셰이크에서 개막된 제15차 비동맹운동(NAM) 정상회의에 참석해 미국이 ‘적대적 행동들’로 상황을 ‘심각한 대치’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난, 그는 “주권과 평등에 대한 존중 원칙이 부정되는 곳에서는 대화가 있을 수 없고 협상도 있을 수 없다”면서 “(6자)회담은...미국과 그에 순응하는 회담 참가국 중 다수가 이 원칙을 포기했기 때문에 영원히 끝났다”고 주장, 김 위원장은 이어 “이런 상황에서 (북한) 정부는 핵 역지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결정적인 조치들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

● **北조평통, 李대통령 유럽 순방 발언 비난(7/15, 조선중앙통신)**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유럽 순방 기간에 한 북한 관련 발언에 대해 “도발적인 험담”이라며 “논의할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조평통 대변인은 중앙통신 기자와 가진 문답에서 “머나먼 유럽나라들까지 찾아가 동족대결 망발을 쫓는(떠든) 것은 그 나라들을 반공화국 핵소동과 제재놀음에 끌어들이고 대북정책 실패로 인한 책임을 모면하고 대내외적 위기에서 벗어나 보려는 가소로운 술책”이라고 주장

● **北, 상업부문 일꾼회의 개최(7/15, 조선중앙방송)**

- 북한은 14일 평양에서 광범기 내각부총리와 김봉철 상업상이 참석한 가운데 ‘상업부문 일꾼(간부)회의’를 열어 “주민들에 대한 봉사활동에서 일대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논의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5일 보도
- 이 회의에는 만포각 지배인, 중국역 식료품종합상점 지배인, 모란봉구역 칠성문식료품상점 책임자, 신의주시 상업관리소 소장, 만경대구역 종합식당 지배인, 대동강구역 동문국수집 책임자 등과 같이 북한 전역의 상업과 급양부문(요식분야) 간부들이 참석
- 방송은 이 회의의 목적에 대해 “우리 인민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시려 끊임없는 선군영도의 길”을 이어가는 김정일 위원장의 “노고를 가슴에 새기고 봉사활동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



● 北량강도 청년비서 탈북(7/14, 오늘의 북한소식, 6/8, 열린북한통신; 데일리NK)

- 데일리NK는 양강도 청년동맹 제1비서 서경식(43)이 최근 청년동맹 자체 검열에서 뇌물수수와 공금횡령 혐의가 드러나자 5월19일 이후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5월 31일 양강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 북한 당국은 그가 중국으로 탈출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중국 공안 당국에 체포를 의뢰한 상황이라는 것
- ‘열린북한통신’도 량강도 소식통을 인용, 청년동맹 1비서에 이어 지난달 1일엔 인민보안성 양강도 보천군 보안서장이 중국으로 탈출하는 등 량강도 고위간부들이 잇따라 탈북했다고 6월 8일자에서 보도, 소식지는 6월 22일자에선 청년동맹 비서의 탈북으로 민심이 동요하고 그 여파가 전국으로 확산되자 북한 보안당국이 그가 체포됐다면 서 ‘위장 체포극’까지 벌였다고 소개
- 14일 발간된 ‘오늘의 북한소식’에서 북한 중앙당이 청년동맹 1비서의 탈북 책임을 물어 도당 책임비서를 비롯해 조직비서, 선전비서, 근로비서, 보위부장 등 수많은 간부들을 6월 17일 무더기 철직해 기관이나 기업소 노동자로 추방했다고 전언

● 北신문, 올해는 변(變)이 나는 해(7/1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3일 ‘변이 나는 해’라는 제목의 장문의 정론에서 “우리 나라에 좋은 바람, 비약의 바람이 불고 있다”며 “이 해는 사변도 많고 흥분시키는 일도 많다”고 밝힘.
- 노동신문은 지난 4월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고 김일성 주석의 97회 생일 행사로 열린 평양 대동강변 ‘축포야회’와 5월1일 노동절을 맞아 보통강변에서 열린 ‘축포야회’ 등을 ‘변’으로 꼽음. 5월 실시된 제 2차 핵실험도 올해의 사변에 포함.
- 노동신문은 현재 진행중인 ‘150일 전투’가 잇따라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6월의 사변에는 신창양어사업소에서 철갑상어의 양식에 성공해 본격적인 양어에 들어간 것도 포함시켰음.

다. 경제 관련

● 北내각, 전력난 해소방안 논의(7/17, 신화통신)

- 북한이 최근 김영일 총리 주재로 내각회의를 열어 전력난 해소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 통신이 17일 보도, 신화사는 민주조선의 보도 내용을 인용, 이날 회의에서 오수용 내각 부총리가 상반기 국민경제계획 집행 상황을 보고했으며 김 총리가 이에 대해 “아주 많은 성과를 거두면서 올해 국민경제계획을 완성할 수 있는 양호한 기초를 다졌다”고 올 상반기 북한 경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소개
- 김 총리는 이어 올 하반기 새로운 경제 임무를 제시한 뒤 생산지표



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라고 독려하면서 특히 전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라고 내각에 지시

- 이날 회의에서 내각은 ‘과학기술이 경제발전과 생산 정상화의 기초’라는데 인식을 같이 해 기술 혁명을 통해 생산과 건설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적극 해결하기로 결의

● 北상점도 24시간 연중무휴 ‘서비스’ 강조(7/17, 연합뉴스)

- 북한에서 군대가 운영하는 삼일포특산물공장 직영 삼일포특산물상점이 하루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인근 병원 면회객들의 수요에 착안한 ‘1회용 국수’ 개발 등 “주민들에 대한 봉사활동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키는 ‘본보기’로 떠오르고 있음.
- 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4월 7일 개점을 앞둔 이 상점과 공장을 현지지도하면서 “당의 경공업혁명 방침을 빛나게 실현한 모범 공장, 본보기 공장”이라고 칭찬한 데 따른 것임.
- 이 상점은 북한에서는 드물게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데 김 지배인은 “처음에는 손님이 있을까 생각했더니 한밤중에도 별의별 사람이 찾아온다”며 “야간에는 국수, 술, 맥주 등을 찾는 사람이 많다”고 설명, 특히 4월 하순부터 ‘150일 전투’가 시작되면서 야식으로 ‘1회용 국수’를 찾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
- 또 개업 초기에는 빵과 아이스크림의 생산은 외부에 위탁했지만 현재는 공장에 생산라인을 갖춰 자체 생산하고 있으며, 술, 꿀, 인단, 껌, 담배 등이 들어있는 조선특산물종합기념세트나 도라지, 더덕, 고비, 고사리, 참나물 등 9가지 마른 나물이 종합된 조선농토산물기념세트도 인기라고 신문은 소개

● 北고려항공, 4년째 유럽취항 금지(7/15, 자유아시아방송)

- 유럽연합(EU)은 북한의 고려항공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항공사의 유럽 취항을 올해까지 4년 연속 금지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5일 보도
- 방송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관계자의 말을 인용, “고려항공의 비행기들은 ICAO의 안전기준에 부합되지 않아서 올해도 취항승인을 거부당했다”고 보도
- 고려항공은 모두 20여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운항중인 항공기 10여대는 1960년대와 70년대 취항한 구 소련제 항공기여서 상당히 노후한 것으로 알려짐.

라. 사회·문화 관련

● ‘단군 유골 발굴’ 월북학자 장우진(7/18, 통일신보)

- 통일신보는 18일 단군 유골을 발굴했다는 서울 출신의 월북 인류학자 장우진 박사를 소개하면서 “지난 40여년간을 조선(한국)사람의



- 北 ‘백두 혈통 철리’ 영화 적극 보급(7/16, 조선중앙통신)
 - 북한에서 지난 6월초 만들어진 예술영화 ‘백두의 봇나무(자작나무)’가 “백두의 혈통을 순결하게 이어나가는 길에 조선 민족의 영원한 행복과 미래가 있다는 철리를 감명 깊게 보여줌으로써 시대가 제기하는 문제를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히 해명”하는 것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소개
 - 통신은 15일 열린 이 영화에 대한 ‘주체적 문예사상 연구모임’에서 토론자들이 이 영화의 이러한 주제에 대해 토론했다고 전하고 “영화는 우리 시대 청년들이 서야 할 위치는 다름 아닌 수령결사옹위의 제일선이며 선군시대 청년들의 사명은 혁명적 전통을 옹호고수하는 선봉투사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힘있게 강조하고 있다”고 토론자들이 말했다고 소개
 - 통신은 이어 “연구모임 토론자들은 모든 창작가, 예술인들이 조선노동당의 문예사상과 이론으로 철저히 무장하며 ‘백두의 봇나무’가 거둔 성과와 경험을 살려 선군시대의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할 데 대해 강조했다”라고 덧붙여 앞으로 이 같은 류의 선전 영화가 더 많이 제작될 것임을 밝힘.
 - 이 영화는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한 주인공이 백두산 혁명전적지 강사로 자원해 활동하는 내용을 담았음.

- 北TV, 김정일 2월 현지지도 기록영화 방영(7/15,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2월 함경남북도, 평안북도, 강원도, 자강도 등의 “수십 개 단위”를 현지지도한 장면들을 편집한 약1시간 분량의 기록영화를 15일 오후 6시 방영
 - 이 영화에서도 두터운 외투차림의 김 위원장은 4월 7일 방영된 영화에서처럼 왼팔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간혹 박수치거나 손을 마주잡을 때만 들어올리고 대부분 오른팔만으로 지시를 하거나 지시봉을 잡았으며, 두세걸음 걷는 것 외엔 와병이전처럼 활발히 걷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음. 하지만 수행원이나 현장 관계자들에게 특유의 다변적인 자세로 비교적 힘있게 뭔가를 말하거나 웃음 띤 표정 위주로 편집
 - 2월 24일 함경북도 회령 현지지도 대목에서 그는 생모인 김정숙의 동상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기도 했으며 특히 회령대성담배공장에서 막 생산돼 나온 담배 한갑을 그가 오른손으로 집어들어 두 손으로 이리 저리 만져 보던 중 수행원이 담뱃갑을 열어주는 장면과 곧이어 그가 담배 한개피를 피우는 모습이 나옴. 김 위원장이 왼손으로는 물건을 잡거나 집을 수 없기 때문에 수행원이 담뱃갑을 열어 한개비를 꺼내준 것으로 보임.
 - 또 2월 6일 함경남도 예술단의 공연을 관람한 김 위원장을 향해 공연자들이 두 팔을 들어 올부짚으며 환호하는 모습도 담겼으나, 현지지도 장면 대부분에선 현지 일반 주민이나 공장 직원들이 단체로



김 위원장을 맞는 모습은 없이 관계자 수명이 김 위원장을 빙 둘러 선 채 저마다 지시사항을 수첩에 받아 적는 모습이 많았고, 군인들이 뒤편과 바깥에서 경호를 서는 장면도 간혹 카메라에 잡힘.

● **北 김일성대, 본교사를 전자도서관으로 개축(7/16, 조선신보)**

- 김일성종합대학의 중심에 있는 오래된 본교사 건물이 새로 지어져 내년 4월까지 현대적인 전자도서관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라고 조선신보가 16일 보도
- 신문은 1946년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처음으로 건설된 본교사가 지난 3월 19일 이 대학 수영관을 현지지도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본교사 ‘개작’ 지시로 전자도서관으로 변모하게 됐다고 설명
- 신문은 “현재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본교사를 완전히 허물고 잔해 제거 작업에 착수했다”고 설명, 그러나 이 건물이 김 위원장 뿐 아니라 그의 부모인 고 김일성 주석과 김정숙 등의 “영도업적이 깃든 (역)사적 건물”인 점을 감안, 새 건물도 외관은 종전 본교사를 그대로 재현하게 된다고 설명

● **北, 홍수피해 예방대책에 총력(7/1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5일 장마철 시작을 알리면서 “나라에서는 해마다 장마철이 오면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들이 전 국가적인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경제부문별 역점사업을 소개
- 전력공업부문은 수력발전소의 “언제(댐)와 도중취수구를 비롯한 수력구조물에 대한 보수 정비”를 통해 “장마철에도 전력생산을 중단 없이 보장”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채취공업부문에서는 강들의 배수설비들을 점검 보수하거나 보강해 침수를 방지하고 있고 캐낸 석탄과 광석들의 유실을 막기 위한 대책에 총력을 쏟고 있다고 보도

2. 대외정세

가. 유엔안보리 제재관련

● **유엔, 대북 제재 北 기업-인물 확정(7/18, 연합뉴스)**

-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 방안을 논의해온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17일 북핵 및 미사일 발사 등에 깊이 관련된 리제선 조선원자력총국장 등 5명의 ‘개인’과 남천강무역회사 등 5개 ‘단체’, 미사일 제조 등에 사용되는 첨단 소재 등 2개 ‘물자’를 대북 타깃리스트(제재 대상 목록)에 추가
- 북한 정부 인사들이 제재 대상에 이름을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



로, 제재 대상에 오른 조선 원자력총국은 북한 핵 프로그램 개발의 ‘컨트롤 타워’임. 총국은 연료 구조물과 재처리시설뿐 아니라 영변 핵연구소와 플루토늄 원자로 등을 관리하고 있음.

- 남천강 무역회사는 원자력총국 산하의 무역회사로 북한 핵 설비시설에서 확인됐던 일본산 진공 펌프 취득 과정과 독일에서 핵 관련 물질을 구입한 사건 등에 연루돼 있으며 1990년대부터 우리나라 농축용 알루미늄 튜브와 다른 장비들의 구매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홍콩 일렉트로닉스는 이란의 키시 섬에 기반을 둔 회사로 기존 안보리 제재 대상인 단천상업은행과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를 대리해 핵 관련 자금들을 취급해 왔고, 수백만 달러의 핵 확산 관련 자금 이동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짐.
- 조선혁신무역회사는 조선 용봉총회사에 소속돼 있으며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연루돼 있고, 조선단군무역회사는 북한 제2과학원 산하 기관으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연구와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과 기술의 획득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음.
- 리제선은 김일성종합대학 출신으로 1997년부터 핵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원자력총국장을 맡고 있으며 최고인민회의 제10·11기 대의원이기도 함. 황석화는 원자력총국에서 핵프로그램 책임국장으로 일하고 있음.
- 윤호진은 남천강무역회사에서 우리나라 농축 프로그램을 위해 필요한 물자를 수입하는 책임을 맡아 왔으며, 리홍섭은 전 영변 핵연구소 소장으로 무기급 플루토늄 생산을 지원하는 3개 핵심 시설을 관장하고 있음. 한유로는 조선용봉총회사의 간부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개입

● 伊 경찰, 김정일 구매 요트 2척 압수(7/17, 이탈리아 리베로뉴스 인터넷판)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탈리아의 한 조선소에 주문한 것으로 알려진 호화 요트 2척이 현지 세무 경찰에 압수됐다고 이탈리아 리베로뉴스 인터넷판이 17일 보도
- 리베로뉴스는 이탈리아 중부 토스카나주 루카 지역 세무 경찰이 북한에 대한 국제 금수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비라에지오 시의 한 조선소에서 김정일 위원장을 위한 두 척의 요트를 압수했다고 밝히고 두 척의 요트 가격은 1천300만 유로(234억원)라고 보도
- 신문에 따르면 현지 당국은 두 척의 요트 주문과 관련, 최초 계약자가 오스트리아의 한 기업인에서 중국 회사로 바뀌는 등 의심쩍은 부분이 발견돼 추적한 결과, 오스트리아 당국의 보고로 돈의 흐름이 요트의 실제 고객인 김정일 위원장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리베로 뉴스는 현재 조사가 계속 진행중이며 이탈리아와 다른 유럽 지역에서 호화 물품을 공급하는 다른 채널들을 규명하는데 조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하고 압수된 요트는 경매에 부쳐 매각될 것이며 중국측을 통해 지급된 북한 정부의 대금도 압류됐다고 소개

나. 북·미 관계

● 美의회, 여기자 석방결의안 표결 연기(7/18,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의회가 국무부의 요청으로 북한에 억류중인 여기자 2명의 석방 촉구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연기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8일 보도
- 방송은 의회 관계자를 인용, “의회가 이번주 여기자들의 조기 석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치려 했으나 국무부로부터 현 상황에서 결의안을 표결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요청을 받았다”고 설명
- 미 국무부가 의회에 결의안 표결 연기를 요청한 배경에는 최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여기자들의 사면을 북한에 요청하고 미 조지아대 박한식 교수가 지난주 국무부와 조율 아래 방북, 여기자 문제를 논의한 때와 맞물려 있다고 방송은 설명

● 美, 대북금융제재 쏠 세계 은행에 영향(7/16, 연합뉴스)

- 미 행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국무부에서 익명을 전제로 한 대북제재 추진 현황 브리핑에서 “유엔 결의 1874호는 각국 정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은행들과 같은 민간부문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거래 본질을 속이는 다양한 금융거래에 관여하고 있는 북한에 매우 강력한 조항”이라고 언급
- 은행들이 자신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핵이나 미사일 거래이든 북한에 들어가는 사치품에 관계된 것이든 불법적인 거래에 말려들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엔 결의 1874호는 “전 세계 은행들에 매우 강력한 영향을 준다”고 그는 설명
- 이 관계자는 최근 대북 금융제재를 위해 미국 대표단이 중국과 말레이시아, 홍콩 등을 방문한 것과 관련, “이러한 대북 금융제재는 그야말로 국제적인 노력”이라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광범위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언급

● 美, ARF서 북과 별도 접촉 계획없다(7/15,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 당국자는 오는 22-23일 태국 푸켓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북한과 개별 접촉을 할 계획이 없다고 15일 밝힘. 스콧 마르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는 이날 국무부에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인도, 태국 방문과 ARF 참석 일정 등을 설명하면서 “ARF에서 북한관리들과 개별적으로 만날 계획은 없다”고 언급



● **클린턴, 北비핵화에 더욱 터프한 노력경주(7/15, 연합)**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15일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위해 관련국간의 더욱 강력한 공동 노력이 있을 것임을 밝힘. 클린턴 장관은 이날 미 외교협회(CFR)에서 행한 미국의 외교정책 관련 연설을 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외교 노력을 설명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향한 더욱 터프한 공동 노력이 장기적 결과로 있을 것”이라고 언급
- 클린턴 장관은 또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대응,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의견을 모으기 위해 상당한 외교적 자원을 투입했다”면서 유엔 안보리의 일치된 대북제재를 이끌기까지의 과정을 소개
- 클린턴 장관은 이어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화와 포용정책의 외교 기조와 관련, “우리의 대화 의향은 (우리가) 약하다는 신호가 아니다”면서 “필요할 경우 세계 최상의 군을 통해서라도 우방과 우리의 이익, 우리 국민을 강력히 지킬 것”이라고 밝힘. 그는 ‘스마트파워’를 사용한 외교를 거듭 강조하면서 미국과 생각을 같이 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한 원칙에 의거한 포용정책 추진 방침도 확인

● **美동아시아 차관보, 北-미얀마 협력 우려(7/14, 자유아시아방송)**

- 커트 캠벨(Campbell) 미 국무부 동태 차관보는 지난달 초 의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핵 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미얀마와 북한 간 협력 관계가 긴밀해 지고 있다”며 “(미국은) 양국 간 협력을 계속해서 자세히 관찰 중”이라고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4일 보도
- 방송에 따르면 캠벨 차관보는 미얀마의 핵 개발 지원국으로 러시아와 북한을 꼽음. 그는 “러시아와 미얀마가 2007년 5월 15일 미얀마에 10MW짜리 연구용 원자로 건설을 포함한 핵협력센터 건립을 위한 합의서에 서명했다”며 “이 합의에 따라 수백 명의 미얀마 과학자가 러시아에서 (핵 관련) 훈련을 받을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과 미얀마 간 관계도 강화되고 있다”며 “러시아와 북한을 포함해 미얀마의 핵 개발을 위한 어떤 외부 지원도 세밀히 관찰하겠다”고 언급

다. 북·중 관계

● **中, 北거부에도 6자회담 추진 강조(7/16, 연합)**

- 중국 정부는 ‘6자회담이 영원히 끝났다’는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발언에도 “6자회담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
-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영남 위원장 발언에 대한 중국 측의 입장을 요구받자 “유관 당사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을 달성하겠다는 약속을 했었다”면서 “중국은 당사국들이 이 약속을 준수하고 실질적인 조치에 나서 6자회담을



- 이 3원칙에 대해서는 미국과 한국, 중국 등 관계국들로 부터 이해를 구했으며, 이날 일본을 방문하는 미국의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와도 이를 중심으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방안을 협의하게 될 것으로 알려짐.

● 日, 北선박검사 특별법안 사실상 폐기(7/15, 연합)

-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對)북한 제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추진하던 북한 관련 선박에 대한 화물검사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사실상 폐기되었음.
- 정부가 제출한 화물검사특별조치법안은 앞서 중의원을 통과했으나 민주당 등 야당이 14일 아소 다로(麻生太郎) 내각에 대한 문책결의안을 참의원에서 가결한 뒤 일체의 법안 심의를 거부함에 따라 참의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사라짐. 임시국회도 이달 28일까지 열게 돼 있으나 아소 총리가 오는 21일 중의원을 해산할 예정으로 있어 사실상 폐막된 상태임.

마. 기타외교 관계

● 北김영남, 비동맹회의서 ‘정상 외교’(7/17, 조선중앙통신)

- 이집트에서 열린 제15차 비동맹운동(NAM) 정상회의에 참석중인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외국 정상 및 외무장관들과 활발히 회동하면서 북한의 명목상 국가원수로서 정상외교를 펼침.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상임위원장은 7월 16일 이번 회의 주최국이자 차기 비동맹회의 의장으로 선출된 이집트의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을 만나 담화, 이 자리에는 북측에서 박길연 외무성 부상과 이집트 주재 북한대사가, 이집트 측에서 대통령관방실 공보비서가 동석
- 김 상임위원장은 이날 마다브 쿠마르 네팔 네팔 총리와 조지 여 싱가포르 외무장관과도 잇따라 회동, 그는 앞서 14일에는 라울 카스트로 쿠바 대통령과 응웬 밍 쩌엣 베트남 국가주석을, 15일에는 오마르 알-바시르 수단 대통령, 나지브 라자크 말레이시아 총리, 카싯 피롬 태국 외무장관 등을 각각 만남.
- 한편 김 상임위원장은 15일 NAM 정상회의에서 “6자회담은 영원히 끝났다”며 6자회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입장을 재차 확인



3. 대남정세

● 北매체, 개성공단 미래는 南에 달려(7/18, 통일신보)

- 통일신보는 18일 ‘불성실하고 대결적인 태도’라는 제목의 글에서 개성공단 계약 재협상을 위한 남북 당국간 실무접촉이 남측의 “불성실하고 대결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또다시 결렬의 위기에 처했다”고 거듭 주장하며 “개성공업지구 실무접촉과 공업지구의 전도는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달려 있다”고 보도
- 신문은 “개성공업지구는 공화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지역이므로 공화국이 관련 법규를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심하고 개정하면 그만”이라며 “하지만 공화국은 북남관계와 남측기업들의 형편을 고려해 현정세와는 무관하게 남측에 협상의 기회를 주고 협상안까지 제시해주는 성의와 아량을 보여줬다”고 주장
- 신문은 또 “공화국의 동포애적 조치에 의해 추진돼온 개성공업지구는 남조선에서 평한 것처럼 ‘중소기업의 출구’였다”며 “그러나 지난 실무접촉의 과정이 보여준 것처럼 친재벌적인 이명박 정권은 남조선 중소기업들의 운명에는 아랑곳 없는 것”이라고 비난
- 신문은 이어 “이명박 정권이 개성공업지구사업과 관련한 공화국의 건설적인 제안을 외면하는 것은 결국 기업들이 개성공업지구에서 스스로 나가게 하려는 술책 외에 다른 아무 것도 아니다”라며 “이것은 북남관계 파괴를 넘어 남조선의 ‘중소기업죽이기’ 책동의 일환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

● 강원도, 금강산 잣나무 방제약품 8월달 지원(7/16, 연합)

- 남북관계 경색으로 남북 강원 간 교류사업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북한 금강산지역의 잣나무넓적잎벌을 방제하기 위한 약품 등이 8월달 북측에 지원될 전망, 16일 강원도에 따르면 금강산지역의 잣나무넓적잎벌 방제를 위한 대북접촉을 통일부에 요청한 결과 최근 방제 약품 및 기자재 반출을 승인받음.
- 이에 따라 도는 3억원 가량의 방제 약품과 초미립 분무기 등의 기자재를 내달 북 강원도에 전달해 금강산지역의 잣나무넓적잎벌 방제 작업을 지원, 도가 그동안 금강산지역에서 실시한 솔잎혹파리 및 잣나무 넓적잎벌 방제작업 규모는 각각 1천600ha와 6천100ha에 달함.

● 54억 투자한 신발업체, 개성공단 철수(7/15, 동아일보)

- 개성공단에 공장용지를 분양받아 입주한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전면 철수를 결정한 기업이 나왔다고 동아일보가 15일 보도, A사는 지난 6월에 철수한 스킨넛처럼 아파트형 공장을 임차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수십억 원을 투자해 땅을 분양받고 공장을 세운 기업임.



아파트형 공장 입주업체는 철수 시 임차보증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지만 분양업체들은 남북 경협보험을 적용받아도 적지 않은 손실이 불가피해 지금까지 철수 결정을 내린 기업은 없었음.

● **평화자동차, 이익금 6억 국내로 첫 송금(7/15, 동아일보)**

- 자동차 조립생산업체인 평화자동차 평양지사가 2007년 처음으로 이익을 내 최근 이익금 6억4000여만 원을 한국 본사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동아일보가 보도, 북한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이익금을 한국에 들여온 것은 처음임.
- 평화자동차 측은 “지난해 북한에서 승용차와 소형 버스 652대를 판매해 벌어들인 이익금 50만 달러(약 6억4500만 원) 중 송금 수수료 등을 제외한 49만8228 달러(약 6억4300만 원)가 5월 말 본사 계좌에 입금됐다”고 이 신문에 밝힘. 이 회사는 1998년 남북 경제협력(경협) 사업에 따라 북한에 진출한 지 10년 만인 지난해 전년 대비 매출액이 116% 증가하면서 첫 이익을 냄.
-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은 제외하고 남북 경협에 따라 실제 사업을 벌이고 있는 기업은 평화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 2개, 삼성전자 등 정보기술(IT) 분야 6개, 서비스 분야 1개(국양해운), 서평에너지 등 지하자원 분야 3개를 합쳐 모두 12개임.

● **北, 6월 개성공단에 인력 700명 추가공급(7/13, 연합뉴스)**

- 개성공단 계약 재협상을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이 헛바퀴를 도는 가운데 북한 당국이 지난달 개성공단 후발업체들에 인력 약 700명을 새로 배정한 것으로 확인돼 북한의 의도가 주목됨.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美, ARF를 ‘5자협의체’로 활용”<RFA>(7/18)

- 미국은 오는 22-23일 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관련국간 사실상의 5자 협의체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미 국무부 고위 관리를 인용해 18일 보도했음. 미 국무부 고위 관리는 이 방송에 “이번 ARF에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참여해 북한의 미사일과 핵을 주요 의제로 다룰 것”이고 이번 ARF는 “북핵 해결을 위해 미국,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관련 5개국이 5자 협의과정(five-party process)을 강화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음.
- 이 관리는 또 “북한이 6자회담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미국, 중국을 비롯한 6자회담 관련국이 북핵 해결을 위한 협의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며 “최근 5자 협의과정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중국과 미국이 이번 포럼을 통해 북핵 문제에 대해 전격적으로 논의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RFA는 전했다.
- 미 국무부의 스콧 마시엘 동아시아 태평양담당 차관보는 앞서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ARF에서 “공식적인 5자회담은 예정에 없지만 미국과 나머지 당사국의 대표가 연쇄적인 양자 회담을 할 계획”이라며 “회담의 형태와 방식은 포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美 “北 비핵화 복귀때까지 제재.압박”(7/18)

- 미국은 17일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과정으로 되돌아올 때까지 대북 제재와 압박을 적극적으로 계속할 방침임을 밝혔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워싱턴 포린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비핵화 과정으로 되돌아오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를 지지할 것”이라면서 “그때까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 조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북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우리가 믿는 일들을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음. 이는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끝내고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보일 때까지 미국의 강한 대북 압박과 제재가 계속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임.
- 크롤리 차관보는 또 유엔 안보리 제재위의 대북 추가제재 대상 선정과 관련, “우리는 북한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



의) 반항에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며, (대량살상무기) 기술이나 무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이 (비핵화) 과정으로 복귀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시작하는 것은 우리의 목표이자 중국, 러시아, 한국, 일본이 공유하는 목표”라고 지적했음. 그는 이어 “북한이 지금 당장 돌아올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을 시사하고 있지만, 우리는 6자회담을 지지한다”면서 “협상의 문은 열려 있다”고 북한의 적극적인 대화 복귀를 촉구했음. 그는 “북한이 이 문을 통해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매우 특정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우리는 어정쩡한(half-way) 조치에 초점을 두고 있지는 않다”고 강조하고 “한반도 비핵화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음.

● 美 “대북 추가제재 만족..유엔과 계속 협력”(7/17)

- 미국은 16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가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5명의 인물과 5개 기업 및 기관, 2개 물자에 대한 제재를 확정된 것에 만족감을 표시하며 긴밀한 협력 방침을 밝혔음. 미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결정에 만족한다”면서 “북한과 관련해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믿을만한 제재가 이뤄지게 됐다”고 말했음. 또 “우리는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및 다른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무기 프로그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이템들과 이런 프로그램에 관여하거나 지원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기관들을 안보리 제재위가 추가 (제재대상으로) 지정하는데 계속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음.
- 국무부는 “이번 결정은 만장일치에 의한 것”이라면서 “이는 국제사회의 일치단결을 보여주는 한편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려는 국제사회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제거하기 위한 2005년의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의 약속을 이행하고, 핵비확산조약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로 되돌아올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음.
- 이와 관련,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계속 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점을 북한에 보여주기 위한 길을 갈 것”이라고 강력한 제재가 계속 될 것임을 시사했음.
- 켈리 대변인은 이어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6자회담은 영원히 끝났다’는 전날 언급과 관련, “위기를 벗어나는 길은 한반도 비핵화를 이끄는 대화로 돌아가는 것”이라면서 “미국의 입장은 명확하다”고 대화 복귀를 거듭 요구했음.



● <안보리 ‘블랙리스트’ 개인·기업 사유>(7/17)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블랙리스트’ 명단을 발표하면서 이들이 연루된 사유도 함께 밝힘. 이날 확정된 5명의 개인과 5개 단체 및 기업들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개발 및 거래에 직접적으로 연루돼 있는 인사들이거나 회사들이라는 것이 제재위의 설명임. 특히 제재 대상이 된 5곳 중 조선 원자력총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주도해온 곳이고, 남천강무역회사와 홍콩일렉트로닉스는 2주전 미국 정부가 제재 대상으로 발표한 곳임. 이날 발표된 개인들은 모두 추가 제재 대상 기관이나 기업의 책임자급 인사들임.

<개인>

- ▲ 윤호진 = 우라늄 확산 프로그램을 위해 필요한 물자를 수입하는 책임을 맡아온 남천강 무역의 책임자.
- ▲ 리제선 = 북한 핵프로그램을 총괄하는 기관인 원자력 총국 국장.
- ▲ 황석하 = 원자력 총국에서 핵프로그램 책임 국장으로 일하고 있음.
- ▲ 리홍섭 = 전 영변 핵연구소 소장으로 무기급 플루토늄 생산을 지원하는 3개 핵심 시설을 관장하고 있음.
- ▲ 한유로(영문이름 Han Yu-ro) = 련각산 수출조합 책임자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개입.

<기업 및 단체>

- ▲ 남천강 무역 = 북한 원자력 총국 산하 무역회사. 이 회사는 북한 핵 설비 시설에서 확인됐던 일본산 진공 펌프 취득 과정에 관여돼 있고, 독일에서 핵 관련 물질을 구입한 사건과도 연관. 또한 1990년대부터 우라늄 확산프로그램에 적합한 알루미늄 튜브와 다른 장비들의 구매에도 연루돼 있음.
- ▲ 조선 원자력 총국 = 북한의 핵 프로그램 개발을 주관하고 있음. 연료 구조물과 재처리 시설뿐 아니라 영변 핵연구소와 5 MWe (25 MWt) 플루토늄 원자로 등을 총 관리하고 있음.
- ▲ 홍콩 일렉트로닉스 = 이란의 키시 섬에 기반을 둔 회사로 기존 안보리 제재 대상인 단천상업은행과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를 대리해 핵 관련 자금들을 취급해 왔음. 수백만 달러의 핵 확산 관련 자금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이란에서 북한으로의 자금 이동에 깊이 관여해 왔음.
- ▲ 조선 혁신 무역회사 = 평양에 본사를 두고 있고, 련각산 수출조합(조선 련봉총회사)에 소속돼 있으며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연루.
- ▲ 조선 단군 무역회사 = 북한 제2과학원 산하 기관으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연구와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과 기술의 획득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음.



● 안보리, 첫 대북제재 인물 5명 확정(7/17)

-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관련해 대북 제재 방안을 논의해온 유엔 안전 보장이사회가 16일(현지시간) 북핵 및 미사일 발사 등에 깊이 관련된 리제선 원자력 총국장 등 5명의 개인에 대한 여행 금지, 해외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확정함. 또 원자력 총국 산하 핵프로그램 담당 기업인 남천강 무역회사, 원자력 총국 등 5개 기업과 기관, 미사일 제조 등에 사용되는 첨단 소재 등 2개 물자에 대해서도 제재를 취하기로 함.
- 이로써 사상 처음으로 대북 제재에 북한 정부 인사들이 포함됐고, 지난 4월 단천 상업은행 등 3곳의 북한 기업과 은행에 대한 해외자산 동결조치에 이어 이번에 5개를 추가시킴으로써 모두 8개 북한 기업이 제재를 받게 됨. 제재위원장을 맡고 있는 파즐리 코르먼 터키 대사대리는 이날 3시간의 전체회의가 끝난 뒤, 명단과 함께 이들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연루 사실을 발표함.
- 코르먼 대사는 “이번 조치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대량살상무기 등에 대한 안보리의 단합되고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의도치 않은 결과를 최소화 하도록 고안됐다”고 설명함. 안보리 제재위가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확정한 제재 대상 북한 인사는 윤호진 남천강 무역회사 책임자, 리제선 원자력 총국장, 황석하 원자력 총국 국장, 리홍섭 전 영변 원자력 연구소 소장,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한유로(Han Yu-ro.한글표기 불분명) 련각산 수출조합(조선 련봉총회사) 책임자 등 5명임.
- 당초 유엔 외교관들은 서방진영이 제시한 15명의 제재 대상 인물 가운데 7-8명 가량이 리스트에 오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날 회의에서 5명으로 최종 확정됨. 이와 관련, 유엔 외교관은 “인물에 대한 제재는 상징적인 것일 뿐”이라며 “인원이 5명으로 줄어든 것은 제재위 참여국들간 타협의 산물로 보면 된다”고 말함. 또 제재 대상 기업이나 단체는 남천강 무역회사, 이란에 소재하고 있는 홍콩 일렉트로닉스, 조선혁신무역회사, 조선 원자력 총국, 조선 단군 무역회사 등 5개임.
- 이들 회사들은 북한 핵 프로그램을 주관하고 있거나, 핵확산 금융거래 및 WMD(대량살상무기) 관련 거래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회사나 기관들임. 유엔 외교관들은 이번 조치가 무역의 상당부분을 무기판매에 의존하고 있는 북한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란을 포함한 북한의 고객들은 평양의 징계를 위한 조치에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함. 이와함께 미사일 제조 등에 사용되는 EDM(방전가공) 사용 탄소화합물 과 아라미드 섬유 필라멘트 등 2개 물자에 대해서도 제재를 확정함.
- 제재위는 제재 대상 물자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를 통해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함. 유엔 관계자는 “이 제재안에 대해선 추가



구했으며, 이날 일본을 방문하는 미국의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와도 이를 중심으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방안을 협의하게 될 것으로 알려짐. 6자회담에서는 북한의 핵시설 가동정지 등 개별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중유지원 등의 대가를 제공해 왔으나 이러한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이 북한의 제2차 핵실험으로 깨짐에 따라 일본 정부에서는 핵폐기의 더욱 엄격한 검증방법을 요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짐.

● 키신저 “북핵협상, 북·미 양자간은 안돼”(7/16)

-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은 14일(현지시간)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회담이 재개된다면 북·미 양자간 회담이 아닌 다자형태로 협상을 해야 한다고 밝힘. 키신저 전 장관은 이날 보수성향의 폭스 뉴스에 출연, “북핵문제는 미국과 북한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와 북한과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함. 키신저는 또 “만약에 6자회담이 다시 열린다면 반드시 시한을 정해서 해야 하고, 북한이 핵무기 능력을 포기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함.
- 그는 “만일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계로 (핵무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북한으로부터 똑같은 양보를 (돈을 주고) 사야하는 과거의 관행으로 되돌아가게 된다”고 말함. 이어 그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시 권력승계 문제와 관련, “삼남(정운)에게 후계자리가 넘어갈 공산이 크다”면서 “다만 30살도 안됐고, 가시적인 행정경험이 전혀 없는 삼남이 권력기반을 확실하게 거머쥘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진단함.
- 키신저는 “만약 이 젊은 청년(정운)이 임명된다면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물밑에서 권력투쟁이 전개될 수도 있으며, 이런 후계결정 과정 등에서 북한 시스템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함.

● 北 김영남 “6자회담 영원히 끝났다”

- 북한의 서열 2위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15일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북한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군축협상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며 6자회담은 영원히 끝났다고 말함. 김 위원장은 이날 이집트의 홍해 휴양지인 샤름 엘-셰이크에서 개막된 제15차 비동맹운동(NAM) 정상회의에 참석해 미국이 ‘적대적 행동들’로 상황을 ‘심각한 대치’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이렇게 말함.
- 그는 “주권과 평등에 대한 존중 원칙이 부정되는 곳에서는 대화가 있을 수 없고 협상도 있을 수 없다”면서 “(6자)회담은 미국과 그에 순응하는 회담 참가국 중 다수가 이 원칙을 포기했기 때문에 영원히 끝났다”고 덧붙임. 김 위원장은 이어 “이런 상황에서 (북한) 정부는 핵 역지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결정적인 조치들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함.



- 이번 비동맹운동 정상회의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세계 각국의 지도자 50여명을 포함, 118개 회원국 대표가 참석했으며 세계 금융위기와 식량부족,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집트와 인도, 유고슬라비아 등이 주도해 1955년 4월에 결성한 비동맹운동에는 아프리카 53개국, 아시아 38개국, 중남미 26개국, 유럽의 벨로루시가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 <中, 5자협의 사실상 반대..대화 '난망'>(7/13)

-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병행해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들이 북한과의 대화, 특히 6자회담 재개 방안을 암중모색하고 있지만 뾰족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고 있음. 무엇보다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입장이 요지부동인데다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협상 과정 재개를 위해 우리 정부가 주도하는 이른바 '5자 협의'와 같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데 그다지 적극적으로 나설 모양새가 아니기 때문임. 중국의 입장은 13일 한·중 6자수석대표 회동에서 분명히 확인됨.
- 6자회담 의장이기도 한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의 이행과 6자회담 재개 방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함. 그는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화를 비롯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관계국들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힘. 안보리 결의 이행에 대해서도 우 부부장은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제재 자체가 아니라 6자 과정으로의 복귀이며 대화를 통한 비핵화의 달성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정부 고위당국자는 전했다. 그동안 중국 정부가 밝혀온 공식 입장을 되풀이한 것임.
- 특히 5자 협의에 대해서도 그는 뚜렷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고위당국자는 5자협의를 대해 중국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고 소개함. 우 부부장도 회동 뒤 외교통상부 청사를 나서면서 '5자 협의에 대한 중국의 생각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6자회담의 틀을 유지할 것"이라고만 답함.
- 이 같은 중국의 행보에 대해 외교 소식통들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북한을 자극할 수도 있는 '5자 협의'와 같은 변화된 이벤트를 추진하기보다는 당분간 북한의 태도를 지켜보기 위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음. 한 소식통은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을 때까지 일단 유엔 차원에서 결의한 대북 제재를 이행하면서 사태를 관망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고 말함.
- 이에 따라 당분간 6자회담 재개를 위한 5자 협의나 중국 특사의 평양 방문 등 특별한 계기가 마련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됨. 고위 당국자는 "현재 정황으로 볼 때 가까운 장래에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계속 논의를 해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며 향후 우 부부장의 방북 가능성에 대해서도 "현재 여건들이 아직 거기에 미치



한 때와 맞물려 있다고 방송은 전했다. 즉 여기자들의 석방 문제에 관한 북미간 물밑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의회가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라고 이 방송은 분석했음.

- 데이비드 스트로브 전 국무부 한국과장도 방송과 인터뷰에서 “여기자들의 석방을 위해 오바마 행정부가 적절하게 물밑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음.
- 미 여야 의원 39명이 공동 발의한 ‘여기자의 석방을 촉구하는 결의안’은 북한 당국이 관용으로 여기자를 석방하고, 여기자의 석방을 위한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며, 다른 나라들도 여기자의 석방을 북한에 권고해 주기를 촉구하는 3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클린턴 “北비핵화에 더욱 터프한 노력경주”(7/16)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15일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위해 관련국간의 더욱 강력한 공동 노력이 있을 것임을 밝힘. 클린턴 장관은 이날 미 외교협회(CFR)에서 행한 미국의 외교정책 관련 연설을 통해 북핵 문제를 위한 미국의 외교 노력을 설명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향한 더욱 터프한 공동 노력이 장기적 결과로 있을 것”이라고 말함.
- 클린턴 장관은 또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대응,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의견을 모으기 위해 상당한 외교적 자원을 투입했다”면서 유엔 안보리의 일치된 대북제재를 이끌기까지의 과정을 소개함. 그는 “셀 수 없이 많은 기회에 내가 일본, 한국, 러시아, 중국의 카운터파트에게 말을 했다”면서 “그들(카운터파트)의 우려를 해소하고, 우리의 원칙과 레드라인(한계선)을 명확히 하면서 진전을 추구했다”고 전함. 그는 “북한에 정말 가혹한 결과를 수반한 2개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안보리 결의는 (이런 노력으로 인한) 단기적 결과”라면서 “우리와 함께 중국, 러시아, 인도가 적극적으로 다른 나라들의 결의 준수를 설득하고 있다”고 말함.

● 美 “ARF서 북과 별도 접촉 계획없다”(7/16)

- 미국 국무부 당국자는 오는 22-23일 태국 푸껫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북한과 개별 접촉을 할 계획이 없다고 15일 밝힘. 스콧 마르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는 이날 국무부에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인도, 태국 방문과 ARF 참석 일정 등을 설명하면서 “ARF에서 북한관리들과 개별적으로 만날 계획은 없다”고 말함.
- 그러나 마르셀 부차관보는 북·미 회동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아 현지에서 상황에 따라서는 즉석 만남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됨. 북한은 이번 ARF에 박의춘 외상 대신 대사급



인 무임소 대사를 파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마르셀 부차관보는 ARF에서 북한 미사일과 핵이 주요의제로 다뤄질 것이라면서 ARF 성명서에 북한과 관련된 부분이 채택될 것이라고 덧붙였음.

- 그는 클린턴 장관이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와는 연쇄적인 양자 회담을 할 예정이지만 6자회담 참가국 가운데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5개국이 참여하는 5자회담은 열리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함. 마르셀 부차관보는 또 이번 회담에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 문제 전문가인 커트 캠벨 국무부 차관보가 클린턴 장관이 이끄는 대표단과 합류해 대북 문제 조율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함.

● “탈북자 미래 남북통합에 소중한 자산”(7/15)

- 칼 거쉬먼 미국 민주주의 진흥재단 회장은 14일 북한 체제의 침식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북한 붕괴에 대비해 탈북자들을 북한 붕괴 이후 미래 남북통합의 가교역할을 하는 소중한 자산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함. 거쉬먼 회장은 이날 주미 한국대사관 코러스하우스에서 북한체제가 수년내 또는 십여년내에 붕괴할지는 알 수 없지만 대비가 필요한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북한 붕괴이후 남북 통합과정에서 1만6천명에 달하는 탈북자들은 소중한 자산”이라고 밝힘.
- 그는 북한을 효과적으로 변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탈북자들의 기여할 수 있으며 특히 이들이 북한 주민들과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거나 북한 주민을 교육하는데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그는 또 북한이 외부 세계와 완전히 고립된 사회는 아니라면서 중국과 베트남과는 달리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부유하고 민주적인 남한이 북한 정권에는 개방과 개혁 과정에서 가장 두려운 변수가 되고 있다고 지적함.
- 거쉬먼 회장은 북핵 6자회담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5자회담에 대해 동북아 문제에서 북한 관련 안보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특히 5자회담은 북한 붕괴이후의 동북아 전체 안보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다자협상틀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함.
- 이와 함께 미국의 신임 대북인권특사 임명과 관련, 거쉬먼 회장은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톰 랜토스 전 하원 외교위원장 비서실장을 지낸 로버트 킹 전(前) 하원 외교위원회 국장이 사실상 내정된 것 같다고 밝힘. 거쉬먼 회장은 킹 전 국장에 대해 “매우 훌륭한 사람”이며 “인권문제에 대해 매우 활발한 경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함. 하지만 미 국무부는 신임 대북인권특사 임명과 관련, “어떤 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음.



● “美, ‘대북 봉쇄’ 주장 솔솔” <LAT> (7/14)

-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 일각에서 대화 위주의 대북 정책을 버리고 봉쇄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LAT)가 14일 인터넷판에서 보도함. 미국의 많은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이 6자회담 개최에 협조해줄 것이란 희망을 버리기 시작했으며, 일부는 아예 새로운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것. 이들 관리는 대화가 소용없는 일이며,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장비 거래를 차단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LAT는 전함.
- 한 고위급 관리는 익명을 전제로 “6자회담은 열리지 않고 있다”면서 봉쇄 정책 말고는 다른 선택이 없다고 말함. 봉쇄 정책이란 세계 2차 대전 당시 미국과 동맹국들이 옛 소련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도입했던 정책을 뜻함. 이러한 주장은 북한이 대화를 중단한 채 핵 연료봉을 재가동하고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석달 전부터 나오기 시작함.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도 지난 4월 북한의 회담복귀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낸 바 있음.
- 6자 회담을 통한 대북 대화 정책을 포기한다는 것은 대북 조치를 내릴 때 러시아나 중국같이 북한과 친한 국가들과 협력하는데 도움을 줬던 외교적 도구를 버린다는 점을 뜻함. 여기에는 북한이 무기 제조 프로그램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장비를 수입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의미도 담겨 있음.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물자 수입을 막는 방안에 협조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미 정부 당국자들은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는 데 찬성한 만큼 양국의 입장이 강경해진 것으로 보고 있음.
- 북한의 무기 실험을 둘러싸고 국제 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은 미국이 이들 국가로부터 도움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빅터 차 전(前)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담당 국장은 분석함. 그러나 북한이 대화 제의를 해온다면 미국은 국제 사회로부터 회담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수도 있다고 차 전 국장은 덧붙였음.

다. 중·북 관계

● “中 대북 수출 지원성 루트 부각” (7/18)

- 중국의 대북 수출액이 지난해 12월 급증했으며 수출 통로로 지린(吉林)성 루트가 부각되고 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미·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18일 보도했음. 신문에 따르면 북중 무역은 통상 중국 랴오닝(遼寧)성 루트가 전체의 30%가량을 차지하는 대동맥이지만 지난해 12월에는 지린성에서부터 북한 북동부 벨트가 전체 무역액의 절반을 넘었음. 신문은 또 부품의 일부는 일본에서 중국



- 을 거쳐 북한으로 우회 수출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음.
- 이에 따라 북한이 지난 4월 발사한 로켓 등의 관련 부품이 지난해 12월에 발사 지점에서 가까운 지린성 루트를 통해 북한으로 반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부상하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음.
- 미·일 정부가 입수한 북중 무역기록에 따르면 중국의 대북 수출액은 지난해 1년간 약 20억3천323만달러였음. 그러나 지난해 12월 한 달간의 수출액이 4억3천121만달러로 전체의 20%를 넘었음. 예년에는 중국 랴오닝성을 통한 대북 수출이 가장 많아, 지난해도 1년간 총 6억3천906만달러를 차지했음. 그러나 지난해 12월에는 지린성을 통한 대북수출이 랴오닝성 루트의 2.5배인 2억4천114만달러에 달했음. 이는 지난해 12월 중국의 대북 수출액의 절반을 넘는 것임.
- 또 북중 무역 기록을 정밀 분석한 결과 중국의 대북 수출품 가운데는 미사일 연료탱크로 사용될 수 있는 플라스틱제 저장고, 미사일 광학 소재로 사용될 수 있는 안경 제품도 포함돼 있었음. 안경 제품에는 일본의 고도 광학기술이 사용된 것도 있어 일본에서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수출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 미국과 일본 정부는 북중 무역 기록에 8자리 품목별 코드가 기록돼 있는 점을 고려, 우회수출 여부 및 기록과 실제 수출품과의 일치 여부 등을 조사할 것을 중국 세관 당국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 中언론, 유엔 대북제재 구체화에 주목(7/17)

- 중국 언론들은 1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6일(현지시간) 발표한 대북 제재 대상 개인과 기업에 대해 신속하면서도 상세히 보도해 큰 관심을 나타냈음. 관영 신화통신은 17일 새벽(중국 시간)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가 대북 제재조치를 발표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안보리가 북핵 및 미사일 발사에 관련된 5명의 개인과 5개 기업·기관을 확정 발표했다고 보도했음.
- 통신은 또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6자회담 참가국과 안보리 15개 이사국의 입장을 그래픽으로 다뤄 핵실험이 세계 각국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했다는 점도 부각시켰음. 반관영 통신인 중국신문사도 안보리의 구체적 제재대상 확정 소식을 전하면서 제재위원장을 맡고 있는 파즐리 코르먼 터키 대사대리가 "제재대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직접적으로 깊이 관여한 기업과 개인"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 중국 신문신보(新聞晨報)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최근 사진과 함께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고위관리들의 해외여행 제한 등 개인에 대한 제재조치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 中 “유엔결의 중시..北도 예외없어”(7/14)

- 중국 정부는 14일 유엔의 결의 이행을 중시하며 이 원칙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예외일 수 없다고 밝힘.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시종일관 유엔 결의를 이행하는 것을 매우 중시해 왔다”면서 “북한 문제에서도 이는 예외일 수 없다”고 말함. 친 대변인은 북한 핵 관련 인사 15명에 대한 제재 방안에 중국이 최근 긍정적 입장으로 돌아섰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지 않았음.
- 블룸버그 통신은 류전민(劉振民) 유엔주재 차석대사가 “중국 정부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중사하고 있는 북한 고위직 인사들에 대한 제재를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한 바 있음. 친 대변인은 “류 대사의 이런 발언을 들어보지 못했다”면서 “이 정보의 정확성 여부 역시 확실치 않다”고 말함.

라. 일·북 관계

● 日, 北선박검사 특별법안 사실상 폐기(7/15)

-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對)북한 제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추진하던 북한 관련 선박에 대한 화물검사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사실상 폐기됨. 정부가 제출한 화물검사특별조치법안은 앞서 중의원을 통과했으나 민주당 등 야당이 14일 아소 다로(麻生太郎) 내각에 대한 문책결의안을 참의원에서 가결한 뒤 일체의 법안 심의를 거부함에 따라 참의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사라짐.
- 임시국회도 이달 28일까지 열게 돼 있으나 아소 총리가 오는 21일 중의원을 해산할 예정으로 있어 사실상 폐막된 상태임. 일본 정부는 북한의 제2차 핵실험 강행 이후 지난달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된 제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다른 회원국들에 촉구하며 특별 법안을 제출, 이번 회기내 통과를 기대했으나 사실상 폐기됨에 따라 외교적으로 체면을 구기게 됨. 아소 총리는 이에 대해 “(북한의 핵 및 미사일에 대해) 가장 영향을 받는 일본이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참의원으로 넘어온 법안의 심의를 거부한 야당측의 처사에 불만을 드러냄.
- 일본은 당분간 현행법 아래서 가능한 해상자위대의 정보수집 활동 등으로 대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일본의 공해상에서의 선박검사는 현행법 아래서는 유사사태에 준하는 주변사태의 인정을 조건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특별 법안에서는 주변사태의 인정없이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목적으로 한정된 특별조치를 상정함. 법안에서는 “대상 선박이 유엔이 금수품으로 지정한 북한의 특정화물을 실은 것으로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선박이 소속된 국가의 동의와 선장의 승락을 조건으로 해상보안청이 화물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마. 기타

● <뉴스위크가 본 김정일의 세아들>(7/19)



왼쪽부터 장남인 정남, 가운데는 차남인 정철. 오른쪽은 후계자로 내정된 정운의 일러스트. <<연합 그래픽뉴스 >>

-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꼽히는 3남 정운을 포함해 정남·정철 등 3형제의 행적과 성향 등을 추적한 기사를 게재해 눈길을 끌고 있음. 뉴스위크는 18일 김 위원장의 세 아들이 모두 북한 권력을 승계할 준비가 돼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김 위원장의 사후엔 북한 내부에서 심각한 권력 투쟁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음.
- 뉴스위크는 익명을 요구한 미국 정보기관 관계자 등의 발언을 인용, 김 위원장의 세 아들이 서구 문물에 호의적인 기질과 성향을 아버지로부터 그대로 물려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미 알려진대로 2만개의 비디오를 보유한 ‘영화광’이며 과거 유엔 주재 북한 대사에게 그가 영웅으로 여기는 할리우드 스타 장 클로드 반담이 주연한 ‘서든 데스’비디오를 구입해 오라고 지시한 적이 있음. 정운을 비롯한 3형제는 미국 NBA 스타들과 유명 기타리스트 에릭 클랩튼, 디즈니랜드 등을 좋아하는 동시에 북한 권력의 원천인 김일성 가계의 전통을 중시하고 있음.
- 뉴스위크는 정운 등 3형제 중 적어도 1명 이상이 스위스 상류층 학교에서 어린 시절 교육을 받았다고 보도했음. 1992년 가을 초등학교 4학년으로 보기엔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소년 2명이 리무진을 타고 베른 국제학교(ISB)에 도착했음. 베른 국제학교는 스위스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불과 몇분 거리에 있었음.
- 두 소년은 같은 해 현지 크리스마스 행사에 참여했고 다음해 1월이 되자 청색 운동복을 벗어버리고 청바지를 입고 다녔음. 신원을 밝히길 거부한 학교측 간부는 두 소년이 정확히 누군지를 알지 못했고 물어보지도 않았다고 말했지만 두 소년 중 1명은 김 위원장의 2남 정철이었고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다른 소년 1명은 정철의 경호원이었음. 정철은 ‘농구광’으로 미국 NBA 시카고 불스의 팬이었음. 학교 친구들은 정철이 농구를 잘하진 못했지만 슛을 할때 위로 뛰어 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점프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회고했음.



정철은 ‘박 철’이란 가명을 사용했으며 내성적이고 온화한 성격으로 알려졌다. 뉴스위크는 또 정철이 다닌 스위스 학교 관계자로부터 그가 6학년 또는 7학년 때 쓴 시 일부를 입수했다고 말했다.

- 정철의 시 제목은 ‘나의 이상 세계’(MY IDEAL WORLD)로 ‘내가 이상적인 세상을 갖는다면 나는 무기와 핵폭탄을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할리우드 스타 장 클로드 반담과 함께 모든 테러리스트를 없애버리겠다. 사람들이 마약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썼음.
- 정철은 다소간 무서운 단편 소설을 쓰기도 했는데 제목이 ‘나의 아버지는 유명이었다’로 돼 있음. 내용 중에는 ‘내 아버지가 유명으로 가장해 날 괴롭혔다’는 부분이 있음. 김 위원장은 정철이 권력을 승계하기엔 너무 유약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짐.
- 김 위원장의 장남인 정남은 한때 유력한 후계자로 간주돼 왔지만 2001년 일본 도쿄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다 체포된 적이 있음. 비만에다 당뇨까지 앓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음.
- 최근 유력 후계자로 부상한 정운은 형들보다도 더 알려진 게 없음. 미 정보 당국은 정운이 어린 시절 스위스에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음. 김 위원장의 요리사로 일하다 2001년 일본으로 탈출한 후지모토 겐지는 최근 언론 등과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은 정운이가 7살때 고급 승용차 ‘메르세데스 600’을 몰도록 했고 어린 시절부터 술 마시는 것도 허용했다”며 “정운이가 배짱있는 지도자로서 크도록 배려했다”고 말했다. 정운은 12살때 여동생 여정이 ‘오빠’라고 부르자 ‘장군 동지’라고 불러야 한다고 명령했음. 정운은 18살때 “나는 제트 스키와 롤러 블레이드, 승마 등을 즐기고 있는데 우리 인민들은 뭘 하고 지내냐”며 북한 주민들을 다소간 염려하는 모습도 보였음. 뉴스위크는 그러나 정운과 관련된 후지모토의 증언 부분에 대해선 신뢰성을 의심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음. 뉴스위크는 “후지모토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 대가로 돈을 요구해 받고 있으며 일부 정보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음. 뉴스위크는 후지모토의 돈 요구를 거부하자 후지모토가 뉴스위크와의 인터뷰를 거절했다고 말했다.
- 뉴스위크는 후지모토가 최근 정운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학생 시절 사진을 배포한 적이 있는데 사진의 주인공은 정운이 아닌 한국 학생이 거의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 伊 경찰, 김정일 구매하려던 요트 2척 압수(7/19)

-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탈리아의 한 조선소에 주문한 것으로 알려진 호화 요트 2척이 현지 세무 경찰에 압수됐다고 이탈리아 리베로뉴스 인터넷판이 17일 보도.
- 리베로뉴스는 이탈리아 중부 토스카나주 루카 지역 세무 경찰이 북한에 대한 국제 금수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비라에지오 시의 한 조



선소에서 김정일 위원장을 위한 두 척의 요트를 압수했다고 밝히고 두 척의 요트 가격은 1천300만 유로(234억원)라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현지 당국은 두 척의 요트 주문과 관련, 최초 계약자가 오스트리아의 한 기업인에서 중국 회사로 바뀌는 등 의심적은 부분이 발견돼 추적한 결과, 오스트리아 당국의 보고로 돈의 흐름이 요트의 실제 고객인 김정일 위원장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 리베로 뉴스는 현재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며 이탈리아와 다른 유럽 지역에서 호화 물품을 공급하는 다른 채널들을 규명하는데 조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하고 압수된 요트는 경매에 부쳐 매각될 것이며 중국측을 통해 지급된 북한 정부의 대금도 압류됐다고 덧붙였다.

● 北관리 “아프리카 나라들에 핵무기 확산할 터”(7/18)

- 북한은 북미 대립관계가 지속되는 한 미국에 대적하기 위해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하고 핵무기를 다른 나라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북한의 “대외정책 결정에 깊숙이 관여하는 60대 관리”가 말했다고 미국 맨스필드재단의 아베 객원연구원이 전했다.
- 아베 연구원은 16일(미국 시간) 노틸러스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재한 ‘새단계 진입한 북한: “우리는 더 이상 미국에 관심없다”’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하기 직전인 지난 5월 중순 나흘간 북한을 방문, 이 북한 관리와 나눈 대화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으나 이 관리의 신원에 대해선 더 이상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음.
- 이 북한 관리는 북한의 최종 목표는 여전히 고 김일성 주석의 ‘유훈’ 대로 한반도 비핵화이지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북한이 미국 및 한국과 동등한 입지의 핵보유국이 돼야” 하기 때문에 핵무기 보유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
- 핵확산이 김 주석의 비핵화 유훈에 모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 관리는 “미국이 핵무기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먼저 그들의 힘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우리의 핵무기를 아프리카 같은 데의 다른 나라들에 확산하면 미국 (핵)무기의 힘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고 아베 연구원은 전했다. 이 관리는 특히 미국이 “북한의 실험은 실패작이다”라거나 “북한의 전형적인 벼랑끝 전술이다”는 등의 인식을 보이는 것은 미국의 현 대북 정책이 잠정적인 것을 말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나중에” 북한을 다루겠다는 뜻이어서 결과적으로 북한에 군사력 증강에 필요한 시간을 주는 셈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선 미국에 고마워했다”고 아베 연구원은 덧붙였다.
- 북한 관리는 “50년전엔 미국이 대학생이고 우리는 유치원생이었다면 지금은 미국이 대학생이고 우리는 전문대 학생”이 됐다면서 “시



간은 늘 우리편"이라고 주장하고 "이제부터 우리의 핵무기를 미국을 미워하는 나라들에 팔 것이다. 이를 이유로 미국이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오면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남한을 공격, 통일을 이룰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아베 연구원은 소개했음.

- 아베 연구원은 그러나 불과 수개월전인 지난 1월만 해도 북한내에선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을 놓고 "미국이 우리에게 문호를 열고 있으니 발사하지 말고 미국과 협상 노력을 해야 한다"는 온건론과 "(미국이) 근본적으로 우리를 무시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선 우리가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다"는 강경론이 함께 존재했고, 미국의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을 수용해 평양에서 북미 양자대화를 갖는 것을 검토해보는 등 대미 강경정책이 확립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음. 또 1년전인 지난해 5월 방북, 문제의 북한 관리를 만났을 때는 이 관리가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관심을 강조했었는데 이번엔 "더 이상" 미국과 협상에 관심없다고 명확히 말했다고 아베 연구원은 대비하면서 북한판 대미 '무시정책' 가능성을 주장했음.

● 北김영남, 비동맹회의서 '정상 외교'(7/17)

- 이집트에서 열린 제15차 비동맹운동(NAM) 정상회의에 참석중인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외국 정상 및 외무장관들과 활발히 회동하면서 북한의 명목상 국가원수로서 정상외교를 펼쳤음. 17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상임위원장은 지난 16일 이번 회의 주최국이자 차기 비동맹회의 의장으로 선출된 이집트의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을 만나 담화했음. 이 자리에는 북측에서 박길연 외무성 부상과 이집트 주재 북한대사가, 이집트측에서 대통령관방실 공보비서가 동석했음.
- 김 상임위원장은 이날 마다브 쿠마르 네팔 네팔 총리와 조지 여 싱가포르 외무장관과도 잇따라 회동했음. 그는 앞서 14일에는 라울 카스트로 쿠바 대통령과 응웬 밍 찌엣 베트남 국가주석을, 15일에는 오마르 알-바시르 수단 대통령, 나지브 라자크 말레이시아 총리, 카싯 피롬 태국 외무장관 등을 각각 만났음.
- 이집트 샤름 엘-셰이크에서 16일까지 이틀 동안 열린 이번 NAM 정상회의는 "테러에 맞서기 위한 일치된 대응"을 다짐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으며, 특히 선언문에는 그동안 북한의 입장이 반영돼왔던 이른바 '한반도 조항'이 34년만에 처음으로 삭제됐음.

● "北내각, 전력난 해소방안 논의" <신화사>(7/17)

- 북한이 최근 김영일 총리 주재로 내각회의를 열어 전력난 해소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 통신이 17일 보도. 신화사는 북한의 내각 기관지인 민주조선의 보도 내용을 인용, 이날 회의에서



오수용 내각 부총리가 상반기 국민경제계획 집행 상황을 보고했으며 김 총리가 이에 대해 “아주 많은 성과를 거두면서 올해 국민경제 계획을 완성할 수 있는 양호한 기초를 다졌다”고 올 상반기 북한 경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 김 총리는 이어 올 하반기 새로운 경제 임무를 제시한 뒤 생산지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라고 독려하면서 특히 전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그는 “발전소 시설들이 정상적으로 가동돼 안정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전력 낭비를 엄격하게 막는 한편 건설중인 발전소는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내각은 ‘과학기술이 경제발전과 생산 정상화의 기초’라는데 인식을 같이 해 기술 혁명을 통해 생산과 건설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적극 해결하기로 결의했다.

● 정부, ARF서 ‘역류자문제’ 제기않기로(7/15)

- 정부가 오는 21~23일 태국 푸껫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북한에 장기 역류 중인 현대아산 직원 유모 씨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15일 “북한이 유 씨를 하루빨리 석방해야 한다는 기본입장은 변함없지만 이 문제를 다자간 외교장관회의에서 거론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유 씨 문제를 의장성명을 비롯한 기본문서에 반영한다거나 그런 시도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은 결정됐다”고 밝혔다.
- 이 소식통은 “ARF 외교장관회의에서 장관 발언을 통해 유 씨 문제를 언급할지는 검토 중”이라며 “남북간 해결해야 할 문제를 다자간의 공개적인 자리에서 언급하는 게 바람직한가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검토를 거쳐 ARF 외교장관회의에서 유 씨 문제를 의장성명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물론 전체회의의 석상에서도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금주 중 최종적으로 확정할 것으로 전해진다.
- 지난해 ARF에서 ‘금강산 피격사건’ 및 ‘10.4 남북정상선언’과 관련된 문구가 의장성명에 포함됐다가 삭제된 해프닝도 정부가 이 같은 방침을 선택하게 된 배경의 하나로 보임. 앞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최근 이 문제와 관련, “장·단점이 있는데 인권에 관한 문제이고 국제적인 보편적 가치 측면에서도 매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언급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었다.

● “北, 이란과 거래로 年20억불 이상벌어”(7/15)

- 북한은 이란과의 거래로 연간 20억달러 이상을 벌고 있으며, 효과적인 대북제재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이란간의 항공편 운항을 중국이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래리 닉시 박사는 14일 워싱턴의 싱크탱크 케이트(CATO)연구소에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서 “북한과 이란간 협력 관계로 매년 20억달러 이상을 북한이 벌고 있다”고 주장함.

- 닉시 박사는 “의미있는 대북제재를 위해서는 금융제재 외에 평양과 테헤란간의 항공편 운항을 중단시키는 중국의 행동이 필수적”이라면서 “대북제재의 핵심이슈는 북한과 이란간의 항공편 문제”라고 지적함. 그는 토론회 후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북한과 이란간의 항공편을 통해 과학자와 기술자 및 북한의 미사일, 미사일 부품, 기술 설계도 등이 옮겨지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함.
- 그는 이란과 시리아, 미얀마가 최근 북한의 주요 고객이 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이란의 비중이 크다면서 중국이 북한-이란 항공편에 재급유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함. 이와 함께 그는 “중국이 북한에 지원하는 식량은 전적으로 북한군에 들어간다”면서 “이것이 중단되면 북한에 실질적 압력이 될 것”이라고 관측함. 테드 게일런 카펜터 케이트연구소 국방·외교정책담당 부소장은 토론회에서 “중국은 기본적으로 대북 레버리지(지렛대) 사용을 주저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미국의 전략 변경을 주장함.
- 이와 관련, 그는 “지금은 일괄협상이 필요한 시점으로, 미국은 북한과 진지한 대북협상을 제안해야 한다”면서 수교 및 대사교환, 휴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 등 북한이 원하는 모든 것을 미국은 북한에 제안해야 한다고 말함. 그는 대신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 핵프로그램의 폐기를 요구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일괄협상제안은 중국이 북한과의 협상이 효과가 없는 것이라는 점을 확신시켜 줄 것이라고 분석함.
- 같은 연구소의 더그 반도우 수석연구원은 북한이 붕괴할 경우에 대한 중국의 우려 사안을 미국이 불식시키고 확신을 주는 것이 중국의 대북영향력 행사를 위해 중요하다고 지적함. 특히 그는 북한이 붕괴할 경우 난민 문제가 발생하면 협력하겠다는 뜻을 미국, 한국, 일본이 보여야 하며, 이를 중국에 보증할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이 붕괴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고, 누가 무엇을 하고, 질서는 누가 유지시킬지 등에 대해 지금 논의를 해야 한다”고 북 붕괴 후에 대한 관련국간 논의 필요성을 제기함.
- 이 밖에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소장은 중국의 대북영향력 행사를 설득하기 위한 가장 큰 장애로 중국의 대미 불신을 지적하면서 현재 미국과 중국간에 많은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협력이 제대로 이뤄질지에 의문을 표시함.

● “北, ARF에 무임소대사 파견” <태국외교부>(7/14)

- 북한이 이달 말 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무임소(無任所) 대사를 파견할 것이라고 태국 정부 관계자가 14일



전함. 태국 외교부 고위급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는 19-23일 푸켓에서 열리는 ARF에 북한 외무상이 참석하지 않고 대신 무임소 대사가 북한을 대표해 참석하기로 했다고 밝힘. 이 관계자는 그러나 북한이 장관급 대표를 보내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태국 외무장관은 북한 외무상이 ARF에 참석하도록 설득할 것이라고 말함.

-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및 핵 군축과 관련한 사안이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이며, ARF에 참석한 외무장관들이 한반도 상황에 대한 견해를 교환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함. 미얀마 민주화 같은 지역적 사안도 안건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며, 아세안 지역 경제와 신종플루 공동 대응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음.

● **李대통령 “비료·식량이 남북관계 보장못해”(7/13)**

-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비료와 식량을 준다고 남북관계가 잘된다고 보장할 수 없다”고 밝힘. 이 대통령은 이날 스톡홀름 시내 그랜드호텔에서 가진 동포간담회에서 “고립된 나라, 남으로부터 식량만 지원 받고, 매년 식량을 지원받아야 하니 그때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국제사회는 이를 보상하는 관행이 되풀이되면서 북한은 발전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함. 이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는 기반시설을 깔아주고 기업투자로 북한을 더 빨리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상당한 수준으로 올려놓을 수 있다”고 밝힘.
- 이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이) 당장 배가 고파서 탈북자가 나오고 또 나와서도 다른 나라를 전전하며 고초를 겪고 있다. 같은 민족의 고통에 나는 가슴이 아프다”면서 “북한 주민을 걱정하고 자립시키기 위해 진심으로 도울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강조함. 이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면 한국은 세계와 손잡고 북한에 농사짓는 법, 세계와 경제교류하는 법을 전해주고 싶다. 또 과학기술 교류 활성화로 북한 경제를 발전시킬 것”이라며 “북한이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속도로 일어설 것으로 믿는다. 이제 북한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함.
- 이 대통령은 또 이날 같은 장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것은 결국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고 회담에 나오게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며 “제재나 견제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고 밝힘.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유럽 뉴스전문채널 ‘유로뉴스(Euro News)’와 가진 인터뷰에서 대북지원금의 핵무기 전용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우리도 북한을 도우려 했는데 결과적으로 북한이 핵무장으로 나왔기 때문에 의혹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문제라고 언급한 것”이라고 강조함.
- 그러면서 “북한 제재에 협력해달라고 하는데 다른 소리를 내면 안되지 않느냐”며 “세계가 다 강한 견제를 하고 있는데 한국만 원론적인



소리를 하면 안된다”고 덧붙였음. 이 대통령은 이탈리아 라퀼라에서 열린 G8(선진8개국) 정상회의때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의 양자 정상회담을 언급, “러시아는 앞으로 한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 전에는 과거와 같은 관계로 북한을 대하지 않겠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앞장서서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함.

- 이 대통령은 “G8정상회의에서 식량부족과 같은 북한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으나 핵무기, 미사일 만드는 나라가 무슨 기아냐고 할까 봐 말을 꺼낼 수 없었다”고 소개함.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야권이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개의치 않고 국제공조를 통한 대북 강공책을 유지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함으로써 북한 비핵화를 이루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됨. 또 대북지원금 핵무기 전용 의혹과 맞물려 향후 대북지원은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있는 현금 및 현물 지원을 지양하고 개발지원 쪽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됨.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내주초 대북 ‘워치콘’ 3단계로 완화(7/18)

- 한미연합사령부가 최근 2단계로 격상한 대북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Watch Conditon)을 내주 초 3단계로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1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북한의 도발 움직임이 전혀 없어 한미 협의를 거쳐 다음주 초에 격상된 워치콘을 원래 상태인 3단계로 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 군당국 간에 내주 초에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현재 미국 체류 중인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이 귀국하는 20일께 최종 논의를 거쳐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 다른 관계자는 “북한은 지난 7일 서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7발을 발사한 이후 또 다른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서해 NLL(북방한계선)과 군사분계선(MDL) 일대 등에서의 도발 징후도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 한미연합사는 지난 5월28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비롯한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고 핵실험을 감행하자 3단계였던 워치콘을 2년7개월 만에 2단계로 격상해 첩보위성 및 정찰기 가동, 전자신호 정보수집 등 감시 및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한 바 있음.
- 워치콘은 북한의 군사활동을 추적하는 정보감시태세로 5단계로 구성되며, 단계가 높아질수록 정찰기 등 정보수집 수단과 감시회수, 정보분석요원이 보강됨.



● 샤프 “한·미 미사일 지침 검토 불필요”(7/15)

-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14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문제와 관련, “한국 정부로부터 요청을 받지 못했고 따라서 지금 당장은 이를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힘. 샤프 사령관은 이날 뉴욕 외신기자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문제를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논의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함.
- 샤프 사령관은 이어 “이는 국무부가 논의할 사항이므로 국무부에 직접 문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함. 또 샤프 사령관은 “한·미 동맹은 북한의 어떤 공격도 방어할 수 있을 만큼 확고하며 북한은 핵을 이용한 위협을 중단하고 비핵화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함. 그는 “북한의 어떤 위협에도 대처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북한이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통한 위협을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들어서야 하며 주민들을 돌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함.
- 샤프 사령관은 과거 한미군사훈련은 군사적 관점에서의 훈련에 초점을 맞췄었지만, 최근에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 실제 상황에 대해 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함. 그는 미국과 주변국들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에 다시 나서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북한의 핵실험 후 유엔이 결정한 제재조치를 집행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함.
- 샤프 사령관은 특히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으며, 육상 또는 해상을 통한 어떤 공격도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격퇴할 수 있음을 확신한다고 강조함. 그는 최근 미국과 한국의 주요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마비시킨 사이버 테러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의 배후가 북한이라는 추정에 대해서는 “공격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아직 확인할 수 없다”면서 이는 걱정스러운 일이지만 미군에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함.
- 샤프 사령관은 북한으로 회향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선박 강남호에 대해서는 무기 등 금수물자를 선적했을 가능성이 있었다면서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함. 샤프 사령관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악화 문제나 북한의 권력 승계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 내부의 정치문제나 정보관련 사항은 확인할 수 없다”면서 “북한에 대해 비핵화의 길로 들어설 것을 촉구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함. 추가적인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것은 김 위원장의 선택의 문제이지만 그러지 않기를 희망하고 촉구한다”고 말함.



나. 한·일 관계

● 日방위백서, 5년 연속 독도 자국영토 표기(7/17)

- 일본 정부는 17일 각료회의를 열고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2009년 방위백서를 의결함.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이 영토라고 주장하는 표현을 넣은 것은 2005년 이후 5년 연속임.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서틀외교 차원으로 일본을 방문한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일본 정부가 독도의 자국 영유권을 주장하는 방위백서 채택을 강행함에 따라 한일 간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음.
- 주일대사관측은 이날 “오늘 통과된 방위백서에 독도와 관련한 표현이 전년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힘. 올해 일 방위백서의 독도 관련 내용은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임.

다. 미·중 관계

● 원자바오, 방중 美장관들 접견(7/17)

-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16일 중국을 방문 중인 화교 출신 미국 장관들을 만나 무역과 에너지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다짐함. 중국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원 총리가 베이징 중난하이(中南海)에서 게리 로크 상무장관과 스티븐 추 에너지장관을 접견했다며 이같이 밝힘. 화교 출신으로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 장관직에 오른 추 장관과 로크 장관은 지난 14일부터 취임 이후 처음으로 동시에 중국을 방문하고 있음.
- 원 총리는 미국과 중국 양국간 교류 확대에 의해 세계 경제위기와 기후변화, 테러와의 전쟁, 핵확산 금지 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함. 그는 특히 오는 27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중 전략경제대화를 계기로 양국이 협력 강화하기 위해 서로를 존중하고 동등하게 협의하자고 제안함. 추 장관과 로크 장관은 이번 첫 미·중 전략경제대화가 긍정적인 결과를 낼 것이라고 말하고 무역과 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함.

● <美·中 탄소관세 놓고 마찰>(7/16)

- 미국과 중국이 이른바 ‘탄소관세’를 놓고 마찰 조짐을 보이고 있음. 분쟁은 미 하원이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한 ‘미국 청정에너지와 보호에 관한 법안’(일명 기후법안)을 통과시킨 데서 시작함. 이 법안이 중국을 자극한 것은 미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맞추지 못하는 무역 상대국에 대해 이른바 탄소관세를 물릴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임.



- 중국은 즉각 반발하고 나섬. 중국 상무부는 이 법안이 통과되자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탄소관세 부과는 보호무역주의 시행의 핑계”라면서 강한 어조로 반대하고 나섬. 또 야오젠(姚堅) 상무부 대변인은 15일 기자회견에서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함. 야오 대변인은 “탄소관세 부과에 결연히 반대한다”면서 “선진국이 탄소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개발도상국의 무역보복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함. 특히 야오 대변인이 화교출신으로 미국 장관직에 오른 스티븐 추(60) 에너지 장관이 방중 중이었음에도 이처럼 강하게 말한 것은 중국 정부가 얼마나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방증함.
- 그는 “탄소관세 부과는 선진국이 환경과 에너지 보호를 구실로 보호주의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본 원칙과 교토 의정서상의 정신에도 위반된다”고 말함. 앞서 허야페이(何亞非) 중국 외교부 부부장도 2일 G8 정상회담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통해 미국의 기후법안과 관련, “기후변화를 구실로 무역 보호주의를 추진해선 안된다”는 반대 입장을 밝힘.
- 이같은 중국의 단호한 반대 의사 표시에 스티븐 추 장관은 중국의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해명에 나섰다. 이 법안을 철회할 뜻이 없음을 밝힘. 추 장관은 “미국이 부과하는 탄소관세는 무역장벽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는 각국이 자신의 저탄소 경제와 청정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말함.

● 미·중 전략경제대화 27-28일 워싱턴서 개최(7/14)

- 미·중 전략경제대화가 오는 27일부터 이틀 동안 워싱턴 D.C.에서 개최된다고 백악관이 13일 밝힘. 백악관은 이날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무부와 재무부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미·중 전략경제대화는 양자와 지역·국제 부분에 걸쳐 장·단기적인 전략과 경제적 이해관계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고 양국 협력을 증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함.
- 또 이번 대화는 현재와 미래 현안들을 집중 논의를 할 수 있는 양자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이번 대화가 진행되는 기간에 다이빙귀 외교부 부부장, 왕치산 부총리 등과 회담할 예정이다. 미·중 전략경제대화는 지난 2006년 조지 부시 전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에 의해 처음으로 만들어짐.

라. 미·일 관계

● 美·日, 신 안보공동선언 협의(7/16)

- 미국과 일본 정부가 테러 등 글로벌 규모의 과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미·일 안보공동선언’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에 나선다고 도쿄(東京)신문이 16일 전함. 신문에 따르면 협상은 이날 일본을 방



문하는 커트 캠벨 미 국무부 차관보 등과 일본 정부 관계자 간에 시작됨. 일본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부터 지구 온난화 대책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분야에서 미국과 일본 간의 동맹을 확대, 강화하는 것이 이번 논의의 핵심임.

- 새 선언은 현행 미·일 안전보장조약 체결 50주년이 되는 2010년에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현재의 미·일 안보공동선언이 마련된 1996년 이후 테러와의 전쟁 등 새로운 안전보장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안보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협상의 취지라고 신문은 전함. 현재의 안보공동선언은 1996년 4월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 당시 일본 총리와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에서 발표됨. 냉전 이후의 양국 간 안보와 관련된 문제를 재정직한 문서임. 선언은 미·일 안보가 21세기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정의 기초로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 일본 주변 사태에 대한 양국 간 협력 방안 연구를 추진하도록 했고, 이의 결과물로 1999년 주변사태법이 제정됨. 주변사태법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거나 북한의 내전, 체제 붕괴 등에 대비해 일본 정부가 대처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한 법임. 이 법은 주변사태에 해당하는 경우로 일본 주변 지역에서 무력 분쟁이 발생했을 때나 주변 국가의 정치체제 혼란 등으로 많은 난민이 일본에 유입될 가능성이 클 때 등을 들고 있음.

마. 기타

● **李국방, 러·몽골 방문차 출국(7/19)**

- 이상희 국방부 장관이 러시아와 몽골을 공식 방문하기 위해 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러시아 모스크바로 출국했음. 이 장관은 21일 아나톨리 세르듀코프 러시아 국방장관과 회담하고 올 상반기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 안보 정세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임. 양국 간 국방정책과 교류협력 등 안보 관심사에 대해서도 논의함. 한·러 국방장관회담은 2005년 4월 이후 4년3개월 만에 열리는 것임.
- 이 장관은 지난 4월 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인 23일 야마다 야스가즈(浜田靖一) 일본 방위상, 5월 26일 량광례(梁光烈) 중국 국방부장, 5월 30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과 양자 회담에 이어 이번에 러시아와 회담함으로써 북한의 잇단 도발 이후 3개월만에 주변 4강 군사외교를 마무리하게 됨.
-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러시아 방문으로 주변 주요국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국방장관들과 회담을 함으로써 북한 문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전략적 공조의 틀을 구축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 장관은 이어 22일 한국 국방장관으로는 처음으로 몽골을 방문,



루브산반단 볼드 몽골 국방장관과 회담하고 북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및 지역 안보정세,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과 국제평화유지활동 등 주요 안보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고 24일 귀국할 예정임.

● 北매체 “개성공단 미래는 南에 달려”(7/18)

- 북한 주간지 통일신보는 18일 개성공단 계약 재협상을 위한 남북 당국간 실무접촉이 남측의 “불성실하고 대결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또다시 결렬의 위기에 처했다”고 거듭 주장하며 “개성공업지구 실무접촉과 공업지구의 전도는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 북한 온라인 매체 우리민족끼리에 따르면 통일신보는 ‘불성실하고 대결적인 태도’라는 제목의 글에서 “공화국(북한)도 동족대결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언제까지 호의를 베풀 수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신문은 “개성공업지구는 공화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지역이므로 공화국이 관련 법규를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심하고 개정하면 그만”이라며 “하지만 공화국은 북남관계와 남측기업들의 형편을 고려해 현정세와는 무관하게 남측에 협상의 기회를 주고 협상안까지 제시해주는 성의와 아량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 신문은 또 “공화국의 동포애적 조치에 의해 추진돼온 개성공업지구는 남조선에서 평한 것처럼 ‘중소기업의 출구’였다”며 “그러나 지난 실무접촉의 과정이 보여준 것처럼 친재벌적인 이명박 정권은 남조선 중소기업들의 운명에는 아랑곳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신문은 이어 “이명박 정권이 개성공업지구사업과 관련한 공화국의 건설적인 제안을 외면하는 것은 결국 기업들이 개성공업지구에서 스스로 나가게 하려는 술책 외에 다른 아무 것도 아니다”라며 “이것은 북남관계 파괴를 넘어 남조선의 ‘중소기업죽이기’ 책동의 일환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 北매체 “해외파병부대는 북침 경험쌓기용”(7/18)

- 북한 주간지 통일신보는 18일 남한의 해외파병 상비부대 편성계획과 관련, 해외파병을 통해 실전경험을 축적하고 전사작전능력을 강화해 북침을 감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18일 북한 온라인 매체 우리민족끼리에 따르면 이 신문은 국방부가 지난달 발표한 ‘국방개혁 기본계획’에서 국제사회에서의 국가위상을 고려해 3천명 규모의 해외파병 상비부대를 편성키로 한 것은 “공화국에 대한 침공을 기정사실화하고 그 사전준비의 일환으로 벌여놓은 북침전쟁준비책동”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 신문은 “이미 남조선군부는 평화재건지원의 명목으로 동티모르를 비롯한 여러 분쟁지역들에서 새마을운동, 푸른 천사작전 등과 같은 각종 민사작전을 벌여놓고 조선반도 유사시 공화국 북반부에서 진



행할 치안유지와 주민관리 경험을 축적한 바 있다”고 지적했음.

- 또 남측이 이라크 전쟁에 자이툰 부대를 파견, 평화재건과는 상관이 없는 대규모 장거리 야간 수송작전을 맡아 진행했다며 이는 북침을 위한 군사작전을 속달해 온 것이라고 주장했음. 신문은 이어 해외파병 상비부대 편성계획은 “유엔에 대한 그 무슨 공헌과 다국적협력을 통해 조선반도 유사시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 무력을 조선전선에 손쉽게 끌어들이자는 것”이라며 “총체적으로 미국의 가려운 데를 긁어줘 상전의 환심을 사는 것과 동시에 북침전쟁준비를 완성하는 등 일거양득을 노리고 면밀히 타산한 데 기초해 추진되는 반역 책동”이라고 비난했음.

● 법원 “北주민도 가족관계등록 가능”(7/17)

- 북한 주민도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 수 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음. 2005년 호적제도가 폐지되면서 신설된 가족관계등록부는 가족관계와 혼인관계, 입양관계, 친양자입양관계 등을 증명하는 것으로, 법원이 북한 주민에 대해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할 권리를 인정한 것은 처음임. 서울남부지법 윤준 수석부장판사는 북한에 거주하는 윤모(67)씨 등 4남매가 국내 한 변호사를 통해 낸 ‘가족관계등록 창설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7일 밝혔음.
- 윤 판사는 “신청인들이 북한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데다 특별히 이들에게 가족관계등록을 배제할 만한 결격사유가 없다”고 말했음.
- 윤씨 등은 북한 주민으로는 처음으로 지난 2월 우리나라 법원에 고인이 된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새어머니 권모씨를 상대로 상속권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 화제가 된 바 있음. 윤씨 등이 상속권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신청한 것은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윤씨 측 변호인은 설명했다. 윤씨 측은 친자관계확인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내기도 했음.
- 그러나 이번 가족관계등록 창설이 상속권 소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분석도 있음. 윤 판사는 “가족관계등록 창설 자체는 인정됐지만, 윤씨 등이 기재한 아버지의 본적과 원적, 주민등록번호 등이 실제 아버지의 것인지는 친자관계확인 소송 등을 통해 규명하는 절차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말했음.
- 그러나 윤씨 측 변호인은 “가족관계등록 창설이 인정됐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아버지와 자식 사이라는 관계 증명이 이뤄진 것을 의미한다”며 “이번 결정은 당연히 상속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윤씨 4남매의 아버지는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2남3녀와 아내를 남기고 월남했으나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남한에서 따로 권씨와 결혼한 뒤 2남2녀를 낳아 함께 살다 1987년 사망했음. 이에 윤씨는



지난 2월 구호활동을 위해 북한을 오가는 민간단체 회원을 통해 자필로 된 위임장을 남한 변호사에게 보내 권씨가 증여받은 100억 원 상당의 재산 가운데 일부를 나눠달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음.

● <오바마 6개월> ④한미 맑음. 북미 흐림(7/17)

-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6개월을 맞은 한미, 북미관계는 오바마 행정부 출범 전 나왔던 예상과는 다름. 미국에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한미 간에는 긴장도 예상됐지만 뚜껑을 열어본 결과 어느 때보다 두터운 동맹관계 구축이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반면 일방주의 탈피를 선언한 오바마 정부의 출범으로 북미관계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오히려 지금까지는 거꾸로였음.
- 오바마 정부는 출범 직후 스마트외교 기조에 발맞춰 북한에도 ‘대화 와 포용(engage)’의 기조로 적극적인 접근 정책을 펼쳤음. 북한문제를 전담하는 대북정책 특별대표직을 신설하고, 스티븐 보즈워스 특별대표가 방북 의사를 수차례 피력하며 대북 포용의지를 내보였음. 하지만 북한으로부터 돌아온 답은 대화 거부였음. 오히려 북한은 오바마 정부의 대화 손짓에 오히려 4월 장거리 로켓 발사, 5월 2차 핵실험 등 초강경 도발로 답했음.
- 자연히 북핵 문제에 대한 비판론이 미국 내에서 확산됐음.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북핵 6자회담에 대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고 밝힌 것도 4월부터였음. 이에 대해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담당 국장을 지냈던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오바마 정부가 빡을 맞았다”고 말했다.
- 오바마 행정부 내에서는 현재 새로운 대북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임. 그동안 대화와 협상 쪽에 있었던 대북 기조의 무게중심도 제재와 봉쇄, 압박으로 옮겨가고 있음. “봉쇄로 가는 것 외에 다른 선택할 것이 없을 것 같다”는 오바마 정부 관계자들의 언급도 공공연히 나오고 있음. 출범 당시와는 확연히 달라진 기류임.
- 오바마 정부는 냉전시대의 개념인 봉쇄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고, 결국 북한을 협상의 장으로 끌어내 핵을 포기시키겠다는 전략임. 육·해·공로를 통한 대북 봉쇄의 실질적 효과를 이끌어내려면 북한과 국경을 접해있는 중국, 러시아의 협조가 필수적임. 오바마 정부의 외교 노력도 여기에 집중돼 있는 상태임.
- 특히 주목할 점은 조지 부시 행정부 당시에는 이라크는 물론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한 비난이 적지 않았지만 오바마 정부의 대북 봉쇄정책 추진에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사실상 없는 상태라는 점임.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서 한미 동맹관계는 예상보다 더욱 긴밀해 지고 있음. 한미 양국은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



달 방미 당시 동맹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청사진을 담은 공동비전을 채택했음. 또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지력 제공을 명문화하는 등 양국 간 대북 공동대응을 강화했음. 다만 부시 행정부 시절 체결된 뒤 아직 미국 내에서 비준 절차가 시작되지도 않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문제는 향후 실질적인 한미 동맹강화를 위해 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음. 아직 언제 FTA 비준안이 미 의회에 상정될지는 불투명함.

● 비동맹회의 폐막..‘한반도 조항’ 빠져(7/16)

- 이집트 샤름 엘-셰이크에서 15일부터 이틀 동안 열린 제15차 비동맹운동(NAM) 정상회의가 “테러에 맞서기 위한 일치된 대응”을 다짐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고 16일 폐막함. 특히 이날 선언문에는 그동안 북한의 입장이 반영돼왔던 이른바 ‘한반도 조항’이 34년만에 처음으로 삭제됨.
- 회원국들은 채택한 ‘샤름 엘-셰이크’ 선언에서 모든 형태의 테러리즘에 반대하며, 테러에 맞서 싸우기 위해 유엔 헌장 및 국제법에 따른 ‘일치된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함. 회원국들은 국제 사회의 안보 증진 및 군비 축소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국제사회가 테러리즘에 맞서기 위한 일치되고도 유기적인 대응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함.
- 이어 이스라엘에 팔레스타인 영토 내에 정착촌을 건설하는 행위를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함. 회원국들은 또 쿠바에 대한 경제 제재 종식을 촉구했으며, 군부 쿠데타로 권좌에서 밀려난 마누엘 셀라야 전 온두라스 대통령이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음.
- 특히 ‘한반도 조항’이 삭제와 관련, ‘게스트’ 자격으로 참석한 박인국 주 유엔 대사는 “한반도 조항에는 그동안 주한미군 철수 등 북한의 일방적 주장이 여과 없이 포함됐었다”며 “이번 회의를 준비하는 각료회의에서 북한은 한반도 조항 중 6자 회담 관련 내용을 삭제하려 했으나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저지됐고, 결국 조항 전문이 34년 만에 처음으로 합의문에서 빠지게 됐다”고 설명함. 박 대사는 이런 결과는 북한이 외교 선전장으로 활용해왔던 비동맹 회의에서조차 소외되고 있고, 나아가 국제사회로부터 냉담한 반응을 받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반영해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비동맹회의는 이집트와 인도, 유고슬라비아 등이 주도해 1955년 결성됐으며, 북한은 1975년 가입해 정회원 자격으로, 한국은 1997년부터 게스트 자격으로 비동맹 회의에 참여하고 있음. 한편 이날 폐막식에서 회원국들은 호스니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을 차기 비동맹회의 의장으로 선출했으며, 오는 2012년 열릴 예정인 제16차 비동맹회의는 이란에서 열기로 결정함.



● **李대통령, 티모셴코 총리 접견(7/16)**

-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공식방한중인 올리아 티모셴코 우크라이나 총리를 접견하고 양국 관심사에 대해 논의함. 이 대통령은 “한국에 많이 알려진 분이고 우크라이나 민주화와 산업화에 기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양국이 여러 면에서 관계를 강화해 나가면 이 경제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 이 대통령은 이어 “우크라이나는 인재가 많고, 과학기술 분야의 역량이 많아 발전 가능성이 높다”면서 “양국이 경제는 물론 과학기술, 문화 등 여러 면에서 협력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힘. 이에 대해 티모셴코 총리는 “양국이 서로에게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우크라이나에 많이 투자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함.
- 티모셴코 총리는 이어 “우크라이나는 구소련 국가들중 가장 먼저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한 국가”라면서 “이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남북관계 증진 노력과 대외정책이 매우 실용적이라는 점에서 우크라이나는 이를 전폭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함. 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 “한국도 지난 1997년 금융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다. 우크라이나가 조속히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함. 이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우크라이나의 발전 뿐 아니라 한·우크라이나 관계 발전을 위해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뜻도 전함.
- 티모셴코 총리는 “한국과 같은 나라들이 G20 등에서 적절한 역할을 해줘 까다로운 조건 없이 IMF의 자금지원이 시의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었다”고 사의를 표한 뒤 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초청했고, 이 대통령은 내년 유럽 순방 때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겠다고 약속함.

● **“위구르, 티베트에 공동투쟁 제안”(7/15)**

- 위구르인 망명단체가 티베트 망명정부에 중국에 맞서 공동으로 투쟁할 것을 제안하고 나섰다고 대만언론이 전함. 홍콩 대공보는 대만 중앙통신사의 뉴델리발 보도를 인용, 세계위구르인회의(WUC)가 14일 달라이 라마가 이끄는 티베트 망명정부 앞으로 서한을 보내 중국 공산당 정권하에서 핍박받는 민족끼리 단결해 반중국 공산당 활동을 전 세계적으로 전개하자고 제안했다고 15일 보도함.
- 세계위구르회의의 대변인이자 재미위구르협회 사무총장인 알림 세이토프는 서한에서 “레비야 카디르 의장은 당신들의 협조와 협력을 간절히 원한다”면서 “우리는 모두 중국 식민 제국주의 통치의 공동 피해자”라고 말함. 세이토프는 “당신들은 최근 우리의 동투르키스탄(신장자치구)의 상황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이는 티베트에서 작년에 발생한 사건과 거의 유사하다”고 말함.



- 그는 “당신들이 지난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계 각지의 중국 대사관과 영사관 앞에서 전 세계적인 투쟁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당신들과 중국 공산당의 핍박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모두 단결해 강한 목소리를 보여주자”고 호소함. 그러나 달라이라마 측의 텐진 타클라 대변인은 참고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전했을 뿐 아직 직접적인 논평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신문은 전함.

● 호주 총리, 中에 리오턴토 문제 제기(7/15)

- 호주 총리가 중국의 리오턴토 상하이사무소 직원 구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정치권이 중국의 영사협정 위반을 지적하고 나서는 등 리오턴토 문제가 양국간 외교분쟁화하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음. 케빈 러드 총리는 구금상태에 있는 리오턴토 상하이사무소 직원 4명 가운데 호주 비자소지자인 스티븐 후 석방문제를 지난 14일 밤 중국 정부 관계자에게 제기했다고 밝혔다고 언론들이 15일 전함.
- 그는 지난 14일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정부는 리오턴토 본사가 있는 서호주주의 콜린 바네트 주총리와 리오턴토 측에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사태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고 말함. 러드 총리는 자신과 스티븐 스미스 외교통상부 장관이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중국측 인사들과 직접 접촉할 것 이라고 덧붙였음.
- 그는 지난주 이탈리아에서 열린 G8 모임에서 중국 외교부 부장관과 만나 리오턴토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고 아울러 설명함. 웨인 스완 재무부 장관은 리오턴토가 주최한 중국 관련 포럼에서 “스티븐 후의 구금문제가 중국과의 교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함. 스완 장관은 “호주 정부는 중국을 포함한 외국의 투자에 대해 항상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며 “다만 철광석 생산 및 가격 결정 등 호주 국익과 관련이 있는 사안은 엄정하게 평가한다”고 강조함.
- 자유당 대표 말콤 턴불은 “중국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러드 총리가 직접 나서서 중국 지도자들과 리오턴토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함. 한편 야당은 “중국이 호주 국민 억류시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도록 한 2000년 체결 영사합의 내용을 위반하고 있다”며 “중국은 즉시 스티븐 후 구금 이유 등을 분명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스티븐 후 등 리오턴토 상하이사무소 직원 4명은 지난 5일 뇌물 제공 등의 혐의로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돼 이날 현재 11일째 구금 상태에 있음. 스티븐 후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중국 국적자들임.

● 中-대만, 직항 여객선 시대 개막(7/14)

- 중국과 대만 양안 간에 항공 직항 노선이 개설된지 1년여 만인 13일 직항 여객선 시대가 열림. 중국의 호화여객선 ‘신진차오(新金橋)Ⅱ’호는 이날 오전 11시께 승객 630명을 태우고 푸젠(福建)성 성도 푸저우(福州) 마웨이(馬尾)항을 출발, 10시간여만의 항해끝에 밤 12시



계 대만 지룽(基隆)항에 도착함. 중국 화물선 성다(盛大)가 지난 1997년 4월 컨테이너를 싣고 샤먼(廈門)에서 가오슝(高雄)으로 항해한 양안 간 항로가 처음 열린 후 직항 여객선 출항은 이번에 12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짐.

- 양안 간 직항노선 항공로를 보면 지난 2008년 7월 4일 첫 운항이후 1년간 양안 사이를 운항한 항공기는 모두 4천8편에 달해 약 160만 명을 실어 날랐음. 중국과 대만은 지난 4월 제3차 양안 회담을 통해 전세기 운항 대신 주 270편의 정규 항공편을 운항하기로 합의했고, 양안 간 직항노선 항공기의 정기 운항은 오는 8월 말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 한·EU FTA협상, 2년여만에 타결(7/13)

- 2년 2개월을 끌어온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이 13일 오후 마침내 타결됨. 스웨덴을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스톡홀름 시내 총리실에서 프레데리크 라인펠트 스웨덴 총리와의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EU FTA 협상의 모든 잔여 쟁점에 대한 최종합의안이 마련된 점을 환영했다”면서 “우리 두 정상은 한·EU FTA의 조기 가서명을 위한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 이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한·EU FTA가 세계적인 경제위기시기에 교역과 성장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함으로써 한국과 EU 경제에 중요한 혜택을 가져올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호주의를 배격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게 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함. 이에 따라 한국과 EU는 곧바로 법률검토 작업을 진행, 오는 9월께 협정문에 가서명하고 내년 2월께 정식서명한 뒤 각자 입법부의 비준동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중 FTA를 공식 발효할 예정이다.
- 라인펠트 총리는 공동기자회견에서 “지난주 큰 진전이 이뤄졌지만 EU내에서 이런 식으로 협정을 최종적으로 할 때는 여러 회원국의 동의를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 여러 난제들이 남아 있을 수 있다. 스웨덴이 의장국을 맡는 동안 조율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함.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라인펠트 총리의 발언은 EU집행위 회의 결과, 일부 회원국이 국내 설득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데 대해 의장국으로서 배려한 것”이라고 말함.
- 이 관계자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에바 비올링 스웨덴 통상장관이 오늘 회담을 갖고 최종 합의안 도출을 발표하는 프레스 코뮈니케(공동언론발표문)를 냈다”며 “이는 사실상 한·EU FTA 협상 타결을 발표하는 것”이라고 밝힘. EU는 27개 회원국에 인구 5억명, 국내총생산(GDP) 규모 17조 달러에 이르는 세계 최대의 단일 시장이며 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대한(對韓) 교역규모가 큰 지역으로, FTA가 발효되면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또 한·EU FTA 타결은 아시아시장에 있어 EU와 경쟁관계에 있는 미국에 영향을 미쳐 비준동의를 놓고 교착상태에 빠진 한·미 FTA를 촉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중국, 일본과의 FTA 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됨.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방송된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이번 유럽 순방은 여러 정상들과 만나 한·EU FTA에 대한 최종합의를 도출하는데 큰 목적이 있다. 다행스럽게 몇 개 나라의 반대로 오래 끌어왔던 한·EU FTA가 합의점에 도달하게 됐다”며 “한·EU FTA가 되면 유럽 27개국과 협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어떤 FTA보다 우리 무역에 획기적 변화가 올 것”이라고 강조함.
- 이 대통령은 또 스톡홀름 시내 그랜드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도 “인도도 이르면 8월 초쯤 (우리와 FTA에) 서명하게 되고 미국까지 하게 되면 지구 인구의 50% 이상 차지하는 국가들과 자유 무역을 하게 되는 셈”이라고 평가함.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 교섭 대표는 이날 외교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핵심 쟁점이었던 관세 환급에 대해 EU가 원칙적으로 관세환급을 허용키로 했다”면서 “일방 당사국이 통계에 기초해 역외산 조달 방법에 중대한 변화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 협의를 진행하고, 이견이 있으면 한·EU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른 3인 패널에서 객관적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함.
- 이와 관련, 양측은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관세환급 상한을 5%로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짐. 이 대표는 서비스 분야와 관련, 한국이 제3국과 FTA 등으로 추가적인 개방을 약속하면 이를 EU에도 적용한다는 ‘미래 최혜국 대우’ 조항을 포함시켰다고 말함. 그는 또 한미 FTA 체결시 독소조항이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역진조항(래킷·합의된 개방수준을 후퇴시키는 무역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나 투자자·국가 제소 조항, 의약품 분야의 특허·허가 연계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함.

● 한·스웨덴 정상 “北, 위협행동 즉각 중단”(7/13)

- 이명박 대통령과 프레데리크 라인펠트 스웨덴 총리는 13일 스톡홀름 시내 총리실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과 같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함. 두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 실현을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단합된 대응을 유지해야 하며 현 상황에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의 충실한 이행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청와대가 밝힘.
- 두 정상은 북한의 인권개선과 인도적 지원 등의 문제에 대해 스웨덴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왔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함. 이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들) 강력하게 지키고, 나아가 북한과의 대화의 길을 모색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나오는 것이 핵을 갖고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야 한다”고 밝힘.

- 라인펠트 총리는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고 스웨덴은 (한국과) 같은 의견을 갖고 있다”며 “스웨덴이 EU의장국을 맡고 있는 동안 긍정적인 노력을 하고 북한관계에서도 노력을 할 것이다. 6자회담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표한다”고 말함. 양국 정상은 또 경제·통상분야에 있어 양국간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IT(정보기술) 등 첨단과학, 산업 및 친환경기술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특히 스웨덴의 선진기술을 바탕으로 양국간 추진중인 바이오가스 및 원자력 분야의 협력을 집중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기로 함. 두 정상은 아울러 국제금융위기의 조속한 타개를 위해 양자 및 다자 차원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미래에 대비하는데 있어 녹색성장 전략이 중요하고 기후변화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함.
- 이 대통령은 이어 라인펠트 총리에게 적절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해 주기를 요청했으며 라인펠트 총리는 수락의사를 밝힘.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라인펠트 총리와 함께 ‘한·스웨덴 군사비밀 보호협정’ 서명식에 참석, 양국간 군사교류 및 국방협력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되는 이번 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통해 양국이 국방분야의 기술정보 교환 및 공동 연구개발 등 실질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함.

● <베일 벗는 오바마 외교..어떻게 차별화?>(7/13)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외교적 구상이 현실 속에서 구체적 모습을 드러내고 있음. 지난 11일 아프리카 가나 방문에 이르기까지 취임 이후 반년에 걸쳐 그는 네 개 나라의 수도에서 연설을 했으며 미국의 새로운 외교방식과 달라진 모습을 설파하려 애씀.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 오바마 스타일의 외교가 ‘강인함’과 ‘사랑’의 수사적 균형을 중시하는 새로운 시기를 열려고 노력했다고 평함. 또 시사 주간 타임은 12일 인터넷판 기사를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지구적 지도자라기보다는 ‘지구적 중재자’로, 구세주라기보다는 ‘책임 있는 협력자’로서 미국의 새로운 위상을 보여주려 애썼다고 지적함.
- ◇ WSJ “요구와 선심 병행 외교..이행 여부가 과제” = WSJ에 따르면 오바마 외교의 특징은 각국의 이해관계를 존중하고 대화를 중시하는 방식임. 오바마 대통령은 각국에 명확한 요구 사항을 전달하는 동시에 푸짐한 선물 보따리도 약속하는 모습을 보였음. 그가 그간의 외교 행보를 통해 최우선 정책목표로 제시한 부문은 비핵화와 테러리즘의 대응, 에너지 안보, 효율적 통치의 제고와 제3세계 발전임. 우선 요구는 단호하고 분명함. 체코에서는 미사일 방어(MD) 체



- 제 구축을 여전히 실행에 옮길 의사가 있다고 말했으며 이슬람교도 들에겐 이스라엘의 용인이 불가피함을 역설함.
- 러시아인들에겐 옛 소련연방 국가들의 주권을 존중하고 초강대국 사이의 ‘영합게임(zero-sum game)적’ 사고를 버려야 한다고 촉구함. 이어 부친의 고향인 케냐가 속한 아프리카에서는 대륙의 가난과 불안정성에 대해 스스로의 문제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이라며 뼈아픈 화두도 던짐. 그러나 이를 이행할 경우 그가 약속한 푸짐한 선물보따리는 미국 내에서 반대파의 우려를 높이는 대목임.
 - 공화당의 비판론자들 가운데 일부는 그가 전 세계를 돌며 ‘사과 여행(apology tour)’을 하고 다녔다고 꼬집었음. 오바마 대통령은 가나에서 6개년간 630억달러에 이르는 보건지원을 약속했으며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가 열린 이탈리아 라퀼라에서는 농업개발을 위해 35억달러를 내놓겠다고 밝힘. 그는 카이로 연설을 통해 파키스탄에서 향후 5년 동안 도로와 학교, 병원 건설 등을 위해 연간 15억달러의 지원을 공언했으며, 아프가니스탄의 개발과 상호 교환학생 프로그램 지원 등을 위해 28억달러 이상을 내놓겠다고 밝힘.
 - 그 목표는 과거의 소원한 나라들과 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과 이란을 고립시켜 비핵화를 이루겠다는 계량화하기 힘든 것임. 일부 약속은 더딘 이행으로 인한 논란에 휩싸일 조짐도 벌써부터 나타남. 오바마 대통령은 프라하에서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의 국내 비준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으나 3개월이 지나도록 말뿐임.
 - ◇ 타임 “상대성 강조..新외교 5개축” = 타임은 오바마 대통령이 실천에 옮기고 있는 외교정책의 변화를 다섯 가지 주요 축으로 설명함. 첫째 다문화 경험을 지닌 흑인 혼혈 출신인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다채로운 이력과 자라온 환경을 적절히 활용, 외교정책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음. 오바마 대통령은 가나에서 케냐 출신인 아버지를 강조했으며 이집트에선 이슬람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의 어린 시절 경험을 부각시킴.
 - 그는 “내가 할 수 있다면 당신들도 할 수 있다”는 화두를 지난 대선에 이어 국제정치 무대에서도 적극 활용하며 ‘국가가 아닌 ‘전 세계인’을 상대로 대화를 시도하고 있음. 둘째 그가 시카고 공동체 활동가 시절 몸에 체득한 바, 상대의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인 뒤 차이점보다 공통점을 찾아 협력해나가는 방식은 외교 협상에서도 주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함. 셋째 지난 정권의 이상주의적 관점과 달리 오바마 대통령은 실용주의적 접근을 선호함. 그는 압박의 수단인 외교관계 단절과 직접대화 중단 등 강경책보다 끊임없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추구하며, 이란과도 9월 이전에 대화하자는 입장을 접지 않고 있음.
 - 넷째 미국의 상대성을 인정함. 그는 미국의 민주적 방식이 우월하다고 해서 다른 나라에 이를 강요하지 않겠다고 공언함. 지난 4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가 세계에 많은 것을



제공할 운명을 타고 났다고 해서 다른 나라의 가치와 놀라운 특질을 인정하려는 우리의 바람이 약해지는 건 아니다”고 말함. 그는 “우리가 늘 옳을 수는 없다는 점, 다른 이들이 보다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하며 협력하기 위한 타협과 양보의 대상엔 우리 자신도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도 말함. 다섯째 오바마 외교는 젊은이들을 향해 주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라고 타임은 전했다. 가나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젊은이들을 향해 “미래 세계는 여러분이 만들어나가는 것”이라고 말함.



[참고 1] <한스웨덴 정상 공동회견 문답>(연합뉴스, 7/13)

- (스톡홀름=연합뉴스) 추승호 이승우 기자 = 이명박 대통령과 프레데리크 라인펠트 스웨덴 총리는 13일 스웨덴 스톡홀름 시내 총리실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선언했다. 다음은 공동회견 전문과 일문일답.

◇공동회견 전문

<이명박 대통령>

- 먼저 우리 내외와 대표단 일행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환대해준 국왕 내외분과, 라인펠트 총리와 스웨덴 국민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한국전 당시 의료지원국이며 휴전 이후 현재까지 중립국 감독위 활동에 참여해 온 전통우방국 스웨덴을 양국 수교 50주년이 되는 올해에 방문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50년이 크게 발전할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방문을 통해 스웨덴이 국민정신, 경쟁력, 인재양성 등 여러 분야에서 국가발전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저력을 가진 국가임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 나와 EU 의장국인 스웨덴의 라인펠트 총리는 한-EU FTA 협상의 모든 잔여 쟁점에 대한 최종 합의안이 마련된 점을 환영했다. 우리 두 정상은 한-EU FTA가 세계적인 경제위기 시기에 교역과 성장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함으로써 한국과 EU 경제에 중요한 혜택을 가져올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보호주의를 배격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게 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우리 두 정상은 한-EU FTA의 조기 가서명을 위한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 오늘 나와 라인펠트 총리는 양국 경제발전 방향, 실질협력 강화, 한-EU 협력 증진, 한반도 정세, 국제무대에서의 여러 공통사항인 보호무역주의 배격, 기후변화 등 여러 주요 관심 사안에 대해서도 유익한 대화를 나눴다. 우리 두 정상은 수교 이후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우호협력 관계를 더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 두 정상은 IT 등 첨단 과학, 산업 및 친환경기술 협력 MOU 체결을 기반으로 이들 분야에서의 구체적 협력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스웨덴의 선진 기술을 바탕으로 양국간 추진 중인 바이오가스 및 원자력 분야에서의 협력을 집중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나는 스웨덴이 그간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기여를 해온 데 대해 라인펠트 총리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나와 라인펠트 총리는 북한의 비핵화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긴요한 요소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우리 두 정상은 국제금융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제공조가 강화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고, 차기 피츠버그 회의에 대한 대응도 함께하기로 했다. 또 저탄소 녹색 산업을 발전시켜 온



실가스를 줄이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데도 공감했다. 나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라인펠트 총리와 신뢰와 우의를 쌓게 되고, 양국 간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를 다지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총리에게 적절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라인펠트 총리께서도 흔쾌히 수락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라인펠트 총리와 스웨덴 정부의 협조와 노력에 다시 한 번 감사 드리고 매우 유익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보람 있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프레데리크 라인펠트 총리>

- 스웨덴은 한국 한반도에 진출한 지 오래됐다. 2009년은 바로 스웨덴과 한국이 수교한 지 50주년 되는 해이다. 우리는 사업이나 관광, 외교, 정치 등 여러 면에서 많은 협력관계를 유지했다. 2년 전에 한덕수 전 총리를 스톡홀름에서 영접했다. 대한민국은 스웨덴에 있어서 중요한 교역 상대국이고 많은 협력이 관광과 환경면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이것이 오늘 토의 주제가 됐다. 학술적 측면에서도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런 면에서 많은 협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한국은 EU와도 중요한 교역 상대국이다.
- 그래서 한-EU FTA(자유무역협정)가 스웨덴이 의장국을 맡는 동안 타결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수출의 기회가 양국에 있기를 기대하고 보호무역주의가 아니라는 점을 강력히 보여준다. 오늘 회담은 매우 뛰어났다. G8 정상회담과 경제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누었다. 그리고 경제 부흥도 중요하지만, 금융위기를 타결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말씀드렸다. 또 9월에 피츠버그에서 개최될 G20 정상회담과 기후변화에 대해 논의했고 이명박 대통령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
- 기후변화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갖고 선도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아시아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이 탄소 감축 목표를 발표해 줘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대해 스웨덴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 스웨덴이 EU 의장국을 맡는 동안 긍정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 북한관계에서도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6자회담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표하는 바이다.

◇일문일답

<이명박 대통령>

- 현재 심정은 어떤가. 어느 쪽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것이라고 보나.
- ▲ 결과적으로 EU의 많은 국가들과 한국은 그동안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다. 27개의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견해를 다소 다르게 할 수도 있다. 그것은 우리가 늘 대화와 설득을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풀어 나가는 것



이고 총리 말씀대로 세계가 경제를 다시 회복하고 무역이 다시 활성화 된다고 생각한다. 올해 세계 무역(성장률)이 마이너스 10% 정도 (예상)된다. 1974년과 80년에 아마 2차 오일쇼크 때 마이너스 2~3% 성장한 이후에는 늘 성장해 왔다. 그런데 올해는 10% 마이너스 성장한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세계가 자유무역을 더 활성화시켜서 세계 경제가 회복되고 빠르게 안정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되므로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 특히 EU와의 FTA 체결은 수상이 말한대로 세계 모든 나라에게 자유무역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모든 국가들의 공통적 이익이라고 생각한다.

--유엔의 대북 제재가 충분히 효율적인가.

▲북한이 그동안 핵실험을 두 차례 했다. 이전에도 물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결의한 바 있다. 그러나 그때 결의는 회원 간에 의견이 많아서 의장 성명어로 그쳤다. 그러나 이번에 안전보장이사국 15개 나라가 완전히 만장일치 합의를 봤다. 또 이제까지 결의보다 가장 강력한 결의이므로 이를 세계 모든 나라가 함께 참여해서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북한을 결의하고 규제하는 것은 규제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북한이 핵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나오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려면 이번 유엔 결의는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고, 특히 EU 국가들이 함께 참여해 준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 앞으로 강력하게 지키고 나아가서 북한과의 대화의 길을 모색해서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나오게 하는 것이 핵을 갖고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야 한다. 쉽지 않지만 이를 이루는 게 가능하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라인펠트 총리>

--유럽국가가 불공평하다고 보는 관세환급에 대해 말씀을 나눴나.

▲사실 그 점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얘기하지 않았다. 우리는 세계가 더 보호무역주의보다 자유무역을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점점 보호무역주의로 가는 데 대한 함께 우려했다. 실질적으로 FTA가 체결되면 전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이 옳은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의견을 나눴다. 그래서 스웨덴이 의장국을 맡는 동안 타결되기 바란다. 실무적인 문제는 나중에 실무진에서 구체적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종합의안 도출을 협상타결로 봐도 되나. 한-EU FTA가 발효되기까지 어떤 절차가 남아있나. 양국 관계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

▲EU는 27개국으로 이뤄져 있다. 그래서 큰 걸음으로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지난주에 하나 크게 진전이 이뤄졌지만 EU 내에서 이런 식으로 협정을 최종적으로 할 때는 여러 회원국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여러 난제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모든 회원국이 모두 명확해야 하고 서명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그래



서 스웨덴이 의장국을 맡는 동안 조율하기를 굉장히 희망한다. 양자 관계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 굉장히 긍정적이다. 자유무역이나 녹색기술 환경 등에서 많이 동의하는 부분이고 양국의 경제가 세계의 새로운 상황에 대처할 만큼 충분히 발전했다. 저탄소 분야는 충분히 발전했고 기술적인 해결을 이뤘다.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도 많은 동의를 이뤘다.

(leslie@yna.co.kr)

출처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9/07/13/0503000000AKR2009071320670001.HTML>



[참고 2] <아세안지역안보포럼, EAS는 무엇인가>(연합뉴스, 7/16)

-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이 태국 푸껫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 등에 참석하기 위해 20일 출국한다. 유 장관은 ARF 외에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 등에도 참석,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주요 안보이슈 및 역내 신뢰구축, 국제금융위기, 기후변화, 신종인플루엔자, 재난관리를 비롯한 역내 주요 현안에 대한 협력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 ◇ARF =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와 2차 핵실험 이후 주요 관련국 외교장관들이 대부분 참여해 관심을 끄는 ARF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양한 안보 이슈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정부간 다자안보협의체다. ARF는 남·북한이 동시에 참여하는 유일한 다자안보협의체로 지역 정세와 안보에 대한 건설적인 대화를 촉진하고 아·태지역의 신뢰증진을 위한 '예방외교'에 공헌하자는 설립 목표에 따라 1994년 출범했다.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아세안 대화상대 10개국, 북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몽골, 파푸아뉴기니, 동티모르, 스리랑카 등 모두 27개국이 회원국이며 북한은 23번째 회원국으로 2000년 7월 제7차 ARF 외교장관 회의부터 참가했다.
- 주요 회의체로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매년 한차례 의장국에서 개최되는 외교장관회의가 있고 이에 앞서 회원국의 고위관리들이 회동, 외교장관회의를 준비하는 고위관리회의가 있다. 이 밖에 신뢰구축 및 예방외교 회기간회의와 대테러·초국가범죄, 재난구호, 해양안보, 군축·비확산 등 4개 부문의 회기간회의, 회원국의 국방차관급이 참여하는 안보정책회의가 정기적으로 열리며 실무자급 회의로 회원국이 자발적으로 개최하는 전문가회의, 세미나, 워크숍 등이 있다.
- ◇동아시아정상회의(EAS) = ARF외교장관회의는 아세안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일련의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중 하나다. 아세안은 매년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며 동시에 대화상대국들과 개별적으로 여는 아세안 확대외교장관회의(PMC)와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 ARF를 열어 왔고 2005년부터 아세안+3에 호주와 뉴질랜드, 인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도 함께 열고 있다.
- EAS는 1997년 출범한 아세안+3 체제와 함께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역내 전략적·정치적 현안에 대해 각국 정상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정책 대화의 장이다. EAS 외교장관회의는 그동안 업무 오찬 형식으로 진행됐으나 지난해 7월 싱가포르 회의 때부터 별도의 비공식회의로 개최됐고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22일 오전 비공식회의로 열린다.



- ◇아세안+3·한·아세안 = 유 장관은 22~23일 ARF 외교장관회의와 EAS 외교장관회의 외에도 아세안+3 및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도 참석하게 된다.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는 잘 알려진 대로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국의 외교장관간 협의체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기능적 부분에서 협력체로 이번 회의에서는 오는 10월 열리는 아세안+3 정상회의 준비와 아세안+3의 미래방향이 주요 의제다.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는 아세안 PMC의 일환으로 열리는 것으로,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지난달 6월 1~2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아세안 미래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후속조치를 모색하고 양자간 향후 협력분야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아세안의 대화상대국은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유럽연합(EU)의장국인 스웨덴, 러시아, 인도 등 10개국이다.

(hyunmin623@yna.co.kr)

출처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9/07/16/0503000000AKR20090716171100043.HTML>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